

대선 이후

박근혜의 앞날과 진보의 과제

▶ 3 ~ 6 면

벼랑 끝의 노동자들
누가 등을
떠밀고 있는가

▶ 2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벼랑 끝의 미국 경제

▶ 9 면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13 면

다시듣는 맑시즘2012
그리스 위기의
원인과 대안

▶ 10 ~ 11 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민식
인쇄인_ (주)아아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6499-279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신문사 사정에 따라 다음 호는 3주 후인 1월 28일 발행됩니다.

Left21.com

제96호 | 2013년 1월 7일 ~ 1월 27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포트21

박근혜가 벌써 말 바꾸네

아랫돌 빼서 윗돌 낀 복지 예산

극우 막말 인사 임명

쌍용차 국정조사 번복



2013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주류 언론들은 “보편적 복지 시대 개막”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예산은 97조 4천억 원이고,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이 1백3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1백조 시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견줘 보면, 보육료·양육수당 6천9백여억 원 등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이 약 3천억 원이 늘긴 했다.

그러나 2013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5.2퍼센트(4.8조 원)로, 정부 총지출이 증가하는 수준 정도만 늘었을 뿐이다. 이는 복지 확대에 인색했던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율에 견줘도 떨어지는 수준이다.

대학등록금 지원 5천2백여억 원 등 교육 예산이 좀 더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2000년 이후 7년간 한국의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8퍼센트와 비교하면 결코 높은 증가라고 말할 수 없다.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퍼센트도 안 돼, OECD 평균(20퍼센트)에도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인데도 복지 확대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이다.

보육 예산 등이 늘었음에도 복지 확대가

미미한 것은, 부자 증세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균형재정’을 최대한 맞추려고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식으로 복지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의료비 보조 예산을 2천8백여억 원이나 줄였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예산 8백8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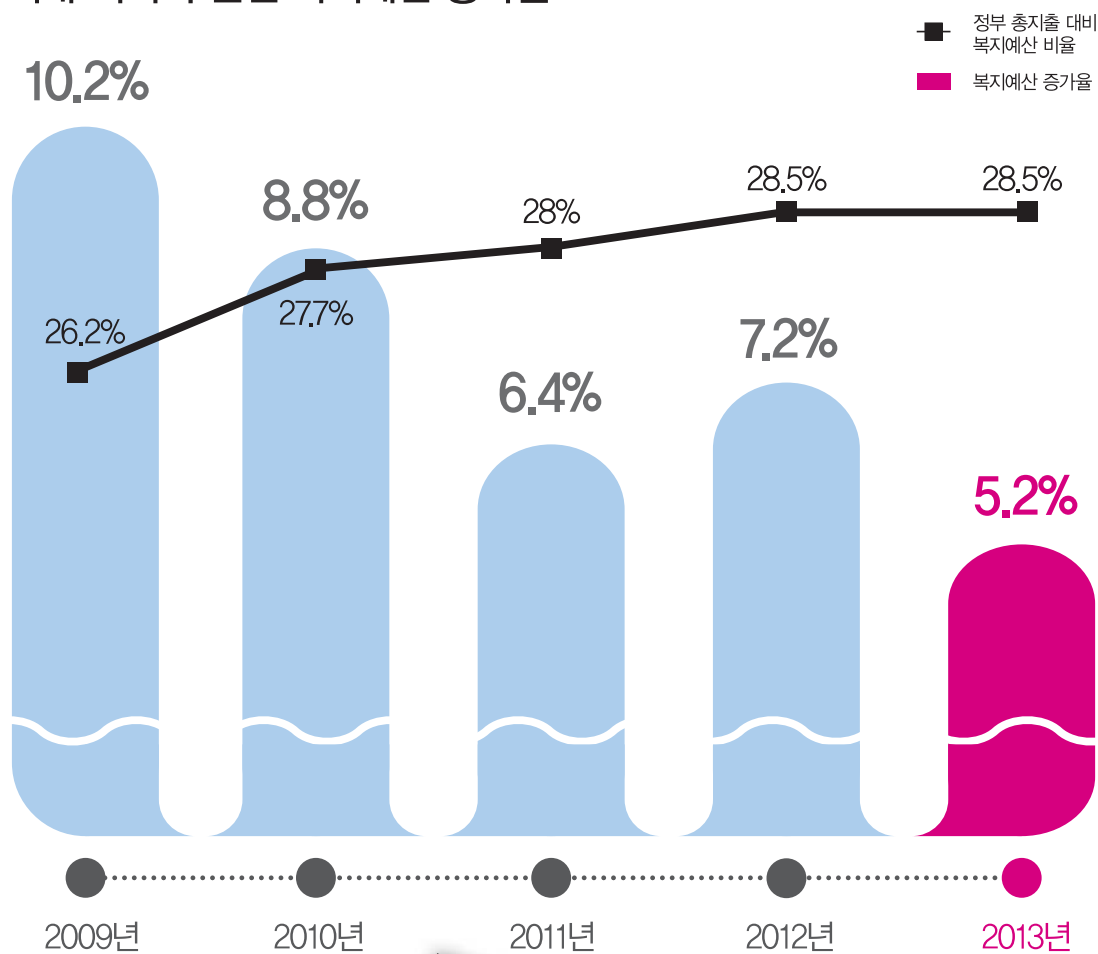
한 끼 1천4백20원이던 보육원 아동들의 식비는 고작 1백 원 오르는 데 그쳤는데, 보건복지부가 아동의 한 끼 식비로 권고한 3천5백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가 공약한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헥타아르당 1백만 원도 지키지 않고 고작 80만 원에 그쳤다.

이런 식으로 더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줄여 다른 복지 예산을 채움으로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노동계급 내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한 듯하다. 실제로 보수언론들은 이를 이용해 보육료·양육수당 확대 같은 보편적 복지를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공약대로 하는 정부는 없다”며 시늉만 하고 있는 ‘박근혜식 복지 확대’조차 반대하고 있다.

▶ 3면으로 이어짐

역대 최저 수준인 복지예산 증가율



리포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일까요?

이명박 “쪽방촌 통로가 좁아 보였다.”
박근혜 “[통로를] 조금 늘려드려야 할 것 같다.”
쪽방촌과 가난한 노인들은 그대로 두고
통로만 넓히면 되나?

“지난 5년간 … 자랑할 만한 일들도 많
이 있었다. …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이명박, 끝까지 진상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감사한 것은 올
해 어느 때보다도 공정보도에 성과가
있는 해”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가 생각하는 공정보도관

“윤봉길 의사가 제 문중의 할아버지다.
윤봉길 의사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될
때 첫 번째 인선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
파평 윤씨 1백20만 명 중
윤봉길과 36촌인 윤창중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
언론계의 한 ‘원로 인사’가 내린 윤창중 평가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담보로 극단적
투쟁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필,
목숨을 거는 것은 반칙?

“이정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처
럼 훌륭한 사람 댜라고 정희라고 지어
줬는데 이런 ‘후레이들 XX’이 어디 있
나.”
이정희를 고발한 자칭 ‘성호스님’ 정한웅

“윤창중 대표가 … 한 말들의 콘텐츠
자체만은 새누리당 저희들이 할 말을,
그러나 저희들이 겁나서 할 엄두를 못
낸 말을 대신 해 준 것”
류근일

“송전탑 위에서, 크레인 위에서, 목숨
을 걸고 의사 표현을 해도 아니 목숨을
던져도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리고 독
거노인, 쪽방촌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
닌다.”
명진스님

“북쪽은 김일성의 손자가, 남쪽은 박
정희의 딸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모했
다 … 북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것도
머쓱해졌다.”
한홍구 교수

연이은 노동자·활동가의 죽음

벼랑에 몰린 사람의 등을 떠미는 게 누구인가

대선 직후 며칠 동안 노동자 4명과 사
회단체 활동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12월 21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씨, 그 다음 날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
청지회 이운남 씨와 민권연대 활동가 최
경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월
25일에는 대학노조 한국외대 지부장 이
호일 씨가 목숨을 끊었고, 그 다음 날에
는 이호일 지부장의 빈소를 지키던 이기
연 수석부지부장이 스트레스성 심근경
색으로 숨졌다.

연이은 죽음에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
노동자들의 죽음과 이들이 남긴 유서
를 보면, 사측의 탄압이 얼마나 악랄했
는지 그리고 희망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
었는지 절절하게 다가온다. 최강서 열사
는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 심장이 터
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운남 열사는 “더
이상 좁은 방에 갇혀서 호느끼고 싶지 않
다”고 했다.

최강서 열사가 일했던 한진중공업은
악질적인 노동탄압으로 유명한 사업장
이다. 지난 20여 년간 노조 탄압과 압박
속에서 무려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곳이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도 한진중공
업 사측은 정리해고와 노조 파괴로 고통
을 전가하려 했다.

2011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이
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확산되면서 압력
을 느낀 사측이 일시적으로 양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곧장 약속을 뒤집
었다.

순환휴직제를 실시했고, 노조에 1백
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백58억 원은 노조가 조합비를 2백70년
간 모아야 하는 규모였다. 이런 사측에
대항할 만한 동력이 충분치는 않았던 듯
하고, 최강서 동지는 “태어나 듣지도 보
지도 못한 돈 1백58억 … 죽어서도 기억
한다” 하며 목숨을 끊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이운남 동
지도 사측의 악랄한 노동자 탄압에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다. 정몽준의 왕국
현대중공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다.

이운남 동지는 2003년 사내하청노



진보연대

‘더는 죽이지 마라’ ‘어제까지 강서라고 부르던 동생이 하루 아침에 열사가 됐다’며 오열하는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조 건설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2004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
일수 열사의 분신으로 촉발된 크레인 점
거 농성에 동참했다가 사측의 경비대에게
폭행당하고 구속됐다.

그 이후에도 사내하청노조 활동을 계
속했지만, 어려워진 생계 때문에 근근이
생존해야 했다. 이운남 동지는 최근에 현
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측
에 의해 탄압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
고 최강서 동지가 절망감에 목숨을 끊은
것을 보면서 좌절한 듯했다.

한국외대 노조 이호일 지부장의 죽음
도 한국외대 당국의 노조탄압이 낳은 비
극이었다.

한국외대 총장 박철은 2006년에 취임
하자마자 학생과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박철은 학생들에게는 고액의 등록금 인
상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노조 탈
퇴 종용과 단체협약 파기, 해고 등의 공
격을 감행했다. 이호일 지부장은 이 과정
에서 엄청난 고통과 영혼의 상처를 얻은
것이다.

이렇듯 최강서 · 이운남 · 이호일 동지
모두 기업주들의 엄청난 노동자 탄압에
내몰린 상황에서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대선에서 박근혜가
패배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한테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은 최경남 동
지의 마음도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
결과마저 실낱 같은 희망을 앗아가자, 절
망이 엄습했던 듯하다.

고립감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가 “벼랑에 몰
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대기표를 받
아주고 있다” 하고 경고한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 당선을 폭력
과 탄압으로 나가도 좋다는 신호탄으로
여긴 정몽구 등의 행태가 좌절감을 더
욱 부추겼다. 그래서 최강서 열사는 “박
근혜가 대통령 되고 5년을 또 …” 라고
했다.

물론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
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여기는 것
은 아닐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적잖은 노
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사측의 양보를 얻
어내고, 그 과정에서 조직과 자신감을 어
느 정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기업주들과 정부가 자행하는 노
동탄압에 단결해 맞서지 않는다면, 현장의 투

쟁 동력이 약해지는 부문이 늘 것이고 그 결
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는 앞으로 더 심화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배 계급의 고통전가에 제대로 맞서 싸
우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과 부문의 경계를 넘어
단결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
자들의 단결 투쟁을 어렵게 하는 손배가
압류와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공동 대응
을 해야 한다.

최근 진보정당들과 정치단체, 노동조
합 상급단체 등이 모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
급대응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
의)를 소집했다.

물론 진보정당들의 분열과 반목, 직선
제 쟁점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지도력 공
백 등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구심을 형성
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더
니, 죽음의 행진에 해결책은커녕 눈길도
주지 않는 박근혜 세력에 맞서며 희망을
지켜내자.

정병호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

손배가압류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들
의 파업으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노동
조합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고, 노조
원 개인들과 신원보증인(주로 가족)들에
게 급여와 부동산까지 가압류를 자행함
으로써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노동탄압
방식이다.

기업주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민
주노조 운동을 공격하는 데 손배가압
류를 이용해 왔다. 특히 손배가압류는
1990년대 말 경제 위기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2년 철도 · 발전 · 가스 공
공부문 3사 연대 파업 이후에는 청구 액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손배가압류에 항의해 분신하면
서 손배가압류는 큰 지탄을 받았다. 그해
말 한진중공업 김주익 · 광재규 열사의
죽음과 뒤따른 저항으로 인한 사회적 압
력으로 한동안 손배가압류 조처는 다소
줄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손배

가압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심지
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
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사법부는
2007년 이랜드 파업에 참가했던 월급
80만 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49명에게
54억 원 가압류 조처를 승인하기도 했



사상선계승 (노동운동의 전통을 잇는다)

**전문학적 액수의 손배가압류는 노동자
탄압 수단 최강서 열사 정신계승 영남권 결
의대회.**

고, 최근에는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손
배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손배가압류는 꾸준
히 늘어, 민주노총 조사를 보면 쌍용차
(2백37억 원), MBC(1백95억 원), 한진
중공업(1백58억 원), 현대자동차 사내하
청(1백16억 원) 등 노조에 대한 손배 청
구 규모는 약 1천5백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 3년 동안에만 무려 7배 가까
이는 것이다.

경총 등 기업주 단체들은 손배가압류
가 ‘불법파업’한테서 기업주들의 재산권
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변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합법으로 용인
되는 파업의 범위가 매우 좁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작업
장 정거 같은 행위를 동반하거나, 구조조
정에 반대하거나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의 파업은 모두 불법이고 공공부문의 파
업은 절차가 까다로워 대체로 불법으로
취급받는다.

특히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는 파업이란 어불성설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기업주들의 재산의 원천인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것은 매우 당연하
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형법에 보장된 “업
무방해” 조항을 이용해 대부분의 파업을
사용자의 영업을 방해해 재산권을 침해
한 범죄행위로 몰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에 의
해서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구속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 지적처럼, 세계적으로 “업무방해죄
는 애초에 노동운동 탄압의 목적으로 탄
생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로 업무방해죄 적용을 약화
시키기도 했다.

진보진영은 현재 청구돼 있는 손배가
압류 조처 철회를 요구하면서, 손배가압
류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치적 투쟁
도 건설해야 한다.

정병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각주 월요일(2013년 1월 28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오후 6:45~8:4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오아시스빌딩 앞)
오후 7:00~8:00
고려대(안암) 정경대 후문 오후 1:00~2:00

각주 화요일(2013년 1월 29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해학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오후 7:00~8:00
수원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오후 7:00~8:00
부산대(부산) 정문 앞 오전 12:00~12:5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 1층 오전 11:30~12:30

각주 수요일(2013년 1월 30일)

충남대 공대2호관 앞(쪽문) 오후 12:30~1:30

각주 목요일(2013년 1월 31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오후 7:00~8:0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집(성균관
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
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박근혜와 ‘내 꿈이 깨지는 나라’

아랫돌 빼서 윗돌 낀 박근혜 복지예산

강동훈

▶ 1면에서 계속

우파들은 국방예산이 3천억 원 정도 삭감된 것도 호들갑스럽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는 2012년에 전직 여전히 3.9퍼센트 오른 것이고, 삭감된 예산들도 사업이 지연돼서 삭감된 것일 뿐 실질적인 삭감도 아니다.

늘었다는 보육예산도 부족해서 올해 말 이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등록금 지원도 학점 제한이 있는데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건설자본과 토건족이 반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약 3천7백억 원 증가해 복지예산보다 많이 늘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실세’들이 자기 지역구의 건설사업 예산 등을 수십~수백억 원씩 늘렸다. 박근혜의 전 지역구인 대구달성이 12억 원,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의 지역구는 6백50여억 원, 원내대표 이한구의 지역구는 2백억 원이 넘게 증액됐고, 민주당 원내대표 박기춘,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지원 등의 지역구도 수십억 원씩 늘었다.

이처럼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건설예산만 늘어난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가 여의도의 한 호텔방에 틀어박혀, 4천5백여 장의 민원성 쪽지를 받아 제멋대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어디서 어떻게 증액이 되고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 … 언론을 통해서 귀동냥을 해야하는” “밀실 야합이었을 뿐이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떠들석하게 선전한 복지 확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잘 보여 줬다. 게다가 박근혜가 내걸은 ‘매년 27조 원씩 총 1백35조 원의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시작부터 깨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아랫돌 빼서 윗돌 끼기’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한 진정한 복지 확대를 위한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예산을 줄여 다른 복지를 지원하는 2013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를 보여 준다.

박근혜 인사가 보여주는 것 극우·막말·부패의 DNA

박근혜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인사를 통해 자신의 보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문신[대선공약]은 지울 수 있어도 DNA는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된 윤창중은 “반(反)대한민국 세력”, “정치적 장녀” 운운하며 박근혜를 반대한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한 인물이다. 게다가 윤창중은 이명박의 추천으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에 추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유승민조차 “너무 극우다. 당장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는 말을 할 정도다.

그런데 윤창중 사퇴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박근혜는 이명박과 협의 하에 또 다시 지독히 보수적인 이동흙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목했다.

이동흙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합헌 의견을 비롯해 ‘미네르바’ 처벌 합헌 의견, 친일 재산 국가 귀속 반대 등으로 보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 왔고, BBK 진상 규명 특검에도 반대하며 정권에 줄을 대

온 인물이다. 이것은 박근혜가 말해 온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가 무슨 의미인지 보여 준다.

게다가 인수위 청년특별위원회에는 중소기업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했거나 서울시의원 당시 돈봉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부패한 자들이 들어갔다.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라며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지지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인수위 정부분과 간사로 임명된 박

효종은 5·16을 혁명으로 미화한 뉴라이트교과서포럼 대표 출신이다. 인수위 고용·복지 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안종범은 2007년에 ‘출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만든 “박근혜 경제 인맥 중 성골”이다.

박근혜는 이런 인사들을 새누리당 내에서도 상의와 검증 없이 ‘밀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가 운운하는 ‘국민대통합’에 대다수 국민은 없다는 점이 인수위 인사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 호크 도입 추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긴장 강화가 아니라 복지 강화를 해라

2012년 12월 21일 미국 국방부가 미 의회에 판매 결정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가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물살을 타고 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의 신예 무인정찰기로, 4천8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20킬로미터 상공에서 정밀 식별할 수 있는데다 미사일로 자체 무장까지 가능한 전략무기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면 “위기 국면에서 돌발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전 반경이 5백 킬로미터 수준인 한반도에 동북아 전역과 남중국해를 포괄하는 정찰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2012년 6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이후 작성된 공동선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처럼,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까지 한국군의 작전 범위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미국 지배계급에 이익이다. 한국(과 일본)과 함께 중국을 포위할 뿐 아니라, 대중국 ‘포위망’에 드는 비용까지 분담할 수 있다.

글로벌 호크는 원가가 2천만 달러가 넘는 매우 비싼 무기인데, 경제 위기 때문에 미 국방예산이 감축되면서 값이 더 올랐다. 1세트(4대) 구입비가 약 1조 3천억 원이고, 연간 운용비만 3천억 원 수준이다.

미국이 “아시아로 [전략의] 중심축을 이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호크를 한국과 일본에 판매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판매 옵션 중에 미 공군이 운영주체로 참여한다는 항목을 넣었다고 알려진 것도 이런 구도에 들어맞는다.

나름의 이해

한국 정부도 나름의 이해가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근변에서 한국 지배계급은 한미동맹을 통해 동아시아 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자 한다. 한국 지배계급은 격화하는 동아시아 내 긴장 구도 속에서 쟁길 것은 쟁길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한다.

지난 31일 여야 합의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 2천10억 원을 전액 통과시킨 결정 또한 이 연장선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산 통과에 포함된 ‘민·군 복합항 이행을 위한 방안 등

을 7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한 뒤 공사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도 모자란지, 정부는 차기 전투기로 F-35 60여 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계약 액수만 7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무기 거래다.

이처럼 한국이 군비를 증강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 지배자들의 신경을 자극한다. 자극을 받은 북한이 핵이나 로켓 개발에 몰두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게다가 글로벌 호크 운영비 6조 원이면 모든 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요, 1년 운영비로만 보더라도 국립대 무상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연 2천2백억 원)보다 훨씬 많다.

국방예산 증액, 제주 해군기지 건설, 최첨단 무인정찰기 도입 등 한국 지배계급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점증하는 중미 갈등 속에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여기에 들인 어마어마한 재원을 복지 확대에 돌려야 옳다.

김인수

폴라주 ⑧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계사년, 벽두부터 허물벗기



illusion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국민불행시대’ 추진의 전망

비관주의와 종파주의 모두 경계해야 한다

유례없는 좌우 양극화 투표 속에 대통령에 당선한 박근혜가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가 될 거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계경제 침체가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상황에서 재벌, 고위관료, 조종동, 옛 군부세력 등 1퍼센트 반동적 지배자들이 ‘경제 위기 고통전개’를 위해 뿔뿔 뿜쳐서 박근혜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국민대통합”을 강조했지만, 당선 직후 그가 만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주고받은 이들은 정몽구 같은 재벌 오너들이었다. 탄압과 장기 투정에 지쳐 목숨을 끊거나 지금도 철탑 위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노동자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치 기반의 뿌리는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정권이다. 정치 일선에 들어선 뒤에는 ‘TK+민정계+사학재단’ 같은 반동적 기득권층이 그의 든든한 기반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각이나 실제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군을 봐도, 이한구·진념·김광두·안종범 등 모두 강경한 신자유주의 우파들이다.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면면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반만 봐도 박근혜 정부는 명백히 **친재벌 신자유주의 강성 우파 정부**를 예고한다.

국제적으로도 세계자본주의 지배자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직후 국가 개입과 경기부양에 돈을 쏟았지만, ‘긴축과 내핍 강요’라는 신자유주의 기조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우파 결집을 추구하면서도 말은 ‘복지·경제민주화’ 등 포퓰리즘을 앞세웠던 박근혜도 선거 막판에는 ‘내가 말한 경제 민주화는 [5년 전] 줄푸레 공약과 다르지 않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가 기본적으로 취할 방향은 분명하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노동계급 생활수준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 중심의 친제국주의 정책도 유지할 것이고, 대북 문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냉전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저항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민주적 권리를 축소하고 사회 분위기가 오른쪽으로 옮겨가도록 시도할 것이다.

2013년 예산도 신자유주의적 균형예산 기조로 확정되면서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보전됐다. 군부는 박근혜 당선 직후 발간한 ‘2012 국방백서’에 NLL이 국경선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해묵



딜레마 반동적 우파도 표를 얻으려니 공수표를 남발했다. 복지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이 약속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은 일을 끄집어내 국가보안법 마녀사냥도 다시 벌이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반동적 성격과 의도를 밝히는 것이 상황이 그들의 뜻대로만 흘러갈 거란 뜻은 아니다. 어떤 행위 주체도 객관적 조건을 무시하고 의지만으로 세상을 주조할 순 없기 때문이다.

반동적 성격

첫째, 곧장 이 나라가 1987년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 민주화의 핵심 동력인 노동운동의 조직과 의식이 [투지가 아주 높지는 않아도] 전반적으로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친기업 정책에 대한 반발로 복지요구가 강해져 왔다. 박근혜가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 무상의무교육 시대!” 같은 구호로 대선 현수막을 도배했던 까닭이다.

또 지난번 대선에서 이명박·이회창·이인제가 얻은 표를 모두 더하면 총 유권자의 약 40퍼센트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들이 모두 결집해 박근혜로 모은 표는 총유권자의 약 38.9퍼센트다. 우파 지지층이 크게 확장됐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셋째, 게다가 박근혜에겐 내뽐 정책을 ‘사회적 타협’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줄 정치적 완충지대 기반이 거의 없다. 심지어 이명박조차도 [실제는 했지만] 한국노총 지도자들을 끌어들이었는데, 박근혜는 그조차도 없다시피하다.

그래서 박근혜는 ‘국민적 합의’란 명분으로 각종 개악에 민주당을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 자체가 하나의 완충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분간 정치 쟁점과 사회적 의제의 우선순위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이데올로기 투쟁의 주요 무대가 국회와 공식 정치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일부와 NGO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개혁주의가 득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결과가 보여주듯, 경제 위기 반동 시대에 개혁주의는 일관된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급진좌파는 개혁주의에 이끌리는 대중 속에 개입하면서 독립적 비판과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박근혜가 표를 위해 제시했던 포퓰리즘 공약을 거둬들이는 것은 자신에게 투표했던 일부 하층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후진 부위도 배신하는 것이다. 반대파가 완고한데, 정치적 완충지대를 못 갖춘 조건에서, 지지층이 이반하는 것은 재

보선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집권당의 안팎에서 상당한 긴장을 낳을 것이다.

정권을 잃을까 봐 몽췌던 보수대연합은 경제 위기 본격화 국면에서 인심 이반이 가중되면, 통치 방식을 놓고 분열할 수 있다. 이런 분열이 상호경쟁적 부패 추문 폭로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은 억눌려던 민중한테 저항에 나설 자신감을 주기도 한다.

3당 합당(보수대연합)으로 정권을 연장했던 김영삼 정부가 1997년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의 압력 속에서 분열한 것이 이런 사례다. 박근혜 세력 자체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므로 부패 문제는 계속 터져나올 것이다. 벌써 인수위원회 임명자들의 각종 비리 전력의 폭로되고 있다.

경계

물론 이런 전망이 반동적 공세에 경계를 늦춰도 된다는 뜻이 될 수는 없다.

지배자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도 저항의 기세와 의지를 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테니 말이다. 노조이기주의 담론, ‘종북’ 마녀사냥, 각종 소수자 공격 등 정치적 회색양을 만들며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1980년대 영국 총리 대처가 처음부터 ‘강성 노동운동을 진압한 철의 여인’이었

던 건 아니다.

전면적 저항을 피하려고 파업권 약화를 위한 법 개악도 집권 후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조심스럽게 추진했고, 인력 구조조정도 노동운동이 약한 부위부터 신중하게 시작했다.

영국 노동운동의 핵심부대인 광원노조는 이런 각계각파 속에서 어느새 고립됐고, 석탄까지 비축해 놓은 뒤 벌인 대처의 공격을 결국 이겨내지 못했다. 이 패배로 영국 노동운동 전반이 침체됐다.

지금은 **지배계급이 반동을 강화하는 경제 위기의 시대**이므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야금야금 먹어오는 공격에 무신경하면 노동운동이 결정적 순간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 각계각파 시도에 계급적 단결과 공동 대응을 추구해야 한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반동을 막고 모순을 이용해 상황을 노동계급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느냐는 조직 노동운동과 반우파 청년들이 투쟁 태세를 얼마나 잘 갖추고 단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가장 나쁜 것이 비관주의에 빠져 우경화하고 전선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적을 과소평가해 단결된 방어 전선 구축에 소홀한 것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김문성

갈피를 못잡고 있는 민주당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넘었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출구전략’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내 계파들은 ‘친노’ 중심의 당내 주류가 중도층을 꺼안지 못했다. ‘친노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식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 여념이 없다. “후보 3자 TV토론에서 분탕질”이 패인 중하나라는 박지원 등 대선 패배 책임의 화살을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에게 돌리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법륜 스님이 “안철수초 단일화하는 카드를 썼으면 이기고도 남는 선거였다”고 하면서 책임 공방은 민주당 밖으로까지 번지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듯하다.

대선 전 꾸렸던 ‘국민연대’에 참여한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민정당’ 건설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아마도 이런 구상의 밑바탕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어느 쪽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었던 민주당**은 이미 총선, 대선을 모두 패배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사실상 NGO 출신인 박원순에게 후보 자리를 내줘야 했다.

그러나 대체로는 ‘애국가도 안 부르는 종북좌파와는 선을 긋고 우클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지원은 “민주당은 중도개혁으로 우클릭해야 한다. 합리적 개혁이나 합리적 보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막말을 탓하며 우클릭했던 4.11 총선 이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박기춘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박기춘은 김진표와 더불어 대표적인 민주당 내 ‘엑스맨’이다. “남양주시의 시대정신은 토건”이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토건족’으로 각종 토건개발 사업을 벌이고 건설업계에 유리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해 온 인물이다. 신한국당에서 도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엑스맨

박기춘은 “뺨속까지 바꾸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변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밀실에서 합의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이 민생예산이라며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민중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학교비정규직 호봉

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강정 주민들이 온몸으로 공사를 막아서며 제주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크게 실효성 없는 부대의견을 추가한 채로 건설 예산안을 전액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는 “급조된 ‘임시 가옥’을 넘어서 ‘항구적인 틀 짜기가 필요’하다며 진보진영이 선거에서의 일시적 야권연대를 넘어 사실상 민주당과 함께 하나의 정당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대선 전 많은 진보진영 인사들과 민주노총 간부들이 문재인, 안철수 캠프로 합류하면서 ‘민주당 왼쪽방’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온 바 있다. 최근 전 노동부장관 남재희도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노동계가 민주당에 흡수되는 미국

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움직임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포퓰리즘적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돈, 인력, 계급적 기반에서 부르주아 정당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결국 조건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불가피한 특정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의 왼쪽에서 진보정당을 재건하고 성장시키는 과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김지윤

대선 평가 논쟁

5060 세대에 밀리고 중도층을 놓쳤다?

대선 결과를 두고 몇 가지 잘못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유행하는 것은 ‘보수적인 5060세대 결집론’인데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까닭을 설명하려는 시도인 듯하다. 즉, 야권이 너무 좌클릭해서 중도층을 놓치고, 보수적 ‘5060세대’가 박근혜 쪽으로 몰리도록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대개 고령화로 인구 구성에서 50대 이상의 비율이 많이 늘어난 데다 선거 당일 출구조사 결과 50대의 투표율이 무려 90퍼센트에 육박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중 62.5퍼센트가 박근혜를 찍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 집단을 단순히 나이별로 나눠 놓고 세대별 투표 성향을 따지는 설명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거나 기존 사회의 편견만 강화하기 십상이다.

50대의 투표율은 이미 15대 대선 때도 88.9퍼센트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노무현이 당선한 2002년에도 50대의 투표율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83.7퍼센트였다. 지금 50대고 당시 40대였던 사람들의 노무현 지지율은 이회창 지지율을 훨씬 웃돌았다.

좀 더 진지하게 50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살펴보려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이 왜 박근혜를 선택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면 하나같이 나이 들면 보수화한다는 ‘상식’을 되뇌일 뿐이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보수화가 선거에서 그토록 중요한 변수라면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유럽 나라들에서는 보수당 정부만 들어섰어야 했다. 또, 이런 논리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출산해야 한다는 허무한 결론에 이를 뿐”(한규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선 때와 달리 박근혜조차 ‘복지나’ ‘경제민주화’ 같은 구호를 내걸 정도로 진보적 의제들이 주류 정치로 많이 흡수된 점도 이번 선거 결과를 단순히 ‘유권자의 고령화와 보수화’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이런 피상적인 세대론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느라 청년 세대가 허리가 휘다’거나 ‘주로 정규직인 40~50대 때문에 88만 원 세대인 20~30대가 피해를 본다’ 하는 지배자들의 이간질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노인 빈곤이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자 증세와 정부 투자로 복지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세대를 넘어서 노동계급의 단결이 필요하다. 지배자들은 노동계급 내에서 세대 간 반목을 부추겨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세대론은 더 나아가 “[고령화 때문에]



1997년(16대), 2002년(17대) 대선에서 진보가 독자 완주해 의미있는 득표를 하고도 우파 정당을 때려치킨 것은 당시 벌어진 거대한 투쟁들 덕분이었다. 사진은 2002년 여중생 사망 항의 촛불 시위.

앞으로 한국 정치가 보수 지향적 투표성향을 보여 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노회찬 의원)는 비판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진보가 선거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성장’이나 NLL 등 안보 문제에서 진보

의 기존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는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로 김기원 교수는 “중도층(을) … 획득하려면 극좌는 당연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좌

파 진영은 중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진화할 것이냐 아니면 도태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섰다”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피상적인 세대론을 버리고 계급적 관점에서 전체 투표 결과를 보면 아주 다른 인식과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선거 결과는 왜곡되고 뒤튼린 방식으로나마 당시 사회세력들 사이의 세력 관계를 반영하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려면 사회 세력 중 가장 강력한 양대 세력인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관계를 봐야 한다.

결집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정치에서도 첨예한 양극화가 벌어졌다. 그 오른쪽 축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박근혜를 중심으로 단단히 결집했다. 이명박이 1987년 이후 최초로 탈당하지 않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들의 결속은 물샐 틈이 없었다.

반면 왼쪽 축을 담당해야 할 진보정당은 지난 총선을 전후로 극심한 분열을 겪었다. 심지어 대선에서는 네 명의 진보후보가 출마했고 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비난이 오갈 정도로 분열의 골이 깊었다. 민주노총은 지지 후보도 정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왼쪽 축을 담당하게 됐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과 진보적 인사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대선을 앞둔 12월 11일에 실시한 여론조

사에서도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에서 다수가 문재인을 지지했다.

그럼에도 이는 우파 결집에 못 미쳤다. 중간계급의 다수가 이 양대 축 사이에서 훨씬 단호하게 결집한 세력으로 견인됐다. 위의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자영업자’와 ‘농림·임업·어민’의 다수가 박근혜를 지지했다.

이 속에서 ‘민주정부’ 때 정리하고·명예퇴직을 당한 뒤 빚을 지고 장사를 해온 가난한 50대 자영업자들이 박근혜에게 기대를 거는 현상도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중도화와 계급 동맹을 통해 이들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 계급과 진보진영이 우파들보다 훨씬 강력히 단결해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줄 때에만 이들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은 박근혜 시대에 예고되는 여러 공격에 맞서며 노동운동의 단결과 공동 대응을 건설해야 한다. 그런 단결과 투쟁이 발전할 때 진보의 독자적 정치 대안도 발전할 수 있다.

작고한 영국의 사회주의자 크리스 하먼은 투쟁의 발전이 진보정당의 성장에도 결정적 구실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영국의] 노동자 계급은 세 번에 걸친 산업투쟁을 거치고 나서야 ‘집단적’ 가치를 쟁취하고 노동당에 투표했다. 노동자 계급을 이 방향으로 이끈 것은 투쟁의 경험이었다.”

장호중

‘박근혜 당선이 이정희 후보 탓’이라는 공격이 노리는 것

이번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 때문에 우파가 결집해서 박근혜가 당선했다는 게 상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앞장서서 이런 주장을 펴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공격했다.

대선 패배의 속죄양을 찾으려는 민주통합당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고 <한겨레>, <경향신문> 등도 이를 거들었다. 그러나 이정희 후보의 언행이 박근혜에게 오히려 도움을 줬다는 주장은 사실로 뒷받침될 수 없다.

통계수치를 봐도 박근혜의 지지율은 TV 토론을 한 이후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대개 정체 상태를 유지한 반면 문재인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대선 직후 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에게 투표한 사람 중 27퍼센트가 1주일 전에 지지를 결정했고 TV 토론과 SNS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보 후보다운 통쾌한 폭로로 박근혜를 궁지에 몰아넣은 이정희 후보.

물론 일부 우파들이 ‘이정희 효과’를 결집의 요소로 꼽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정희 후보의 발언이 박근혜를 지지했던 보수 진영을 불편하게 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TV 토론에서 ‘박근혜가 이정희에게 고문당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정희 후보는 “친일의 후예, 낡고 부패한 유신독재의 뿌리”인 박근혜를 궁지에 몰

아넣으며 우파를 곤혹스럽게 한 반면, 반우파 지지층을 속시원하게 해 줬다.

토론회 직후에 “다가키 마사오”, “전두환 6억” 등은 검색어 1, 2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또 이정희 후보는 “IMF 이후 민주정부 기간 동안 대학 등록금은 올라가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양극화는 심해졌다”며 민주당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이정희 후보의 말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가 단결해서 이런 목소리를 더 크게 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선거에서 박근혜를 막지 못한 이유도 이런 더 큰 배경 속에서 찾아야 한다.

탄압

우파는 선거가 끝나고도 분을 사하지 못하는 듯하다. 당시 새누리당 김성주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짜 흥분해서 … 굉장히 분노했다”며 우파의 분위기를 보여 줬다.

그래서 우파 언론은 국고보조금의 취지를 흐리며 통합진보당이 국민 세금 27억 원을 ‘먹튀’했다고 왜곡과 비방을 하고 있다. 게다가 5백60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고스란히 보전받을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의 27억 원을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법원에서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편향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우파는 이런 공격을 통해서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분열과 반목이 거듭돼 온 진보진영 내부에서 분열의 골이 더욱 깊어지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중북 좌파의 주도 속에 너무 왼쪽으로 가서 중도를 잃은 게 문제’라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도 더 커지도록 부추기려 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분열에 책임이 있는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 지도부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이런 공격과 마녀사냥에는 반대해야 마땅하다.

정선영

끊이지 않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박근혜 당선 축포를 쏘는 공안기관?

박근혜 당선에 축포를 쏘듯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 탄압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가 당선한 바로 다음 날 평화와통일은여는사람들(평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평통사가 벌여 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등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 아니냐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덧씌웠다.

경남지역의 진보적 청년모임인 ‘푸름’도 압수수색 당했다. 아학과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해 온 청년들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2012년 마지막 날, 독일 망명객 조영삼 씨는 18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입국하자마자 국정원에 의해 체포됐다. 조영삼 씨는 한국에서 인연을 맺은 한 비전향 장기수(1993년에 북송)의 초청으로 1995년에 북한을 방문했다가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해야 했고, 이제 귀국해 고령이 된 부모를 만나러 갈 참이었다.

그리고 새해가 밝자마자 검찰은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와 아들 안영민 월간 <민족21> 편집주간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근거없는

‘국민대통합’ 운운하던 박근혜가 당선하자마자 국가보안법 칼날이 여기저기를 쏘서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안영민

월간 <민족21> 편집주간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본 종중련과 접촉했다는 것인데, 당시 이 행사는 통일부가 허가한 사업이었다.

설령 이들이 북한 사회를 찬양·고무했다고 한들 이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토론할 문제이지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지속적 탄압 받았던 민권연대 활동가(최경남 씨)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왜 국가보안법이 당장 사라져야 할 악법인지

를 잘 보여 준다.

특히, 안영민 월간 <민족21> 편집주간에 대한 공격은 박근혜에게 ‘독직구’를 날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후보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민족21>의 편집기획위원이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으로 진보진영의 단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뒷받침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이현주

박근혜 정부를 기다리는 ‘최악의 대외환경’

“협한 바다”, “외부적 시련”. 박근혜 정권이 직면할 동아시아 정세를 두고 언론들이 요약한 말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외부적 조건이 ‘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중국·일본·북한·한국 등에서 독재자나 강경우익 정치인의 직계 자손들이 다시 권력을 잡은 상황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앞으로 5년 동안의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망을 다룬 외교안보연구소 문건, ‘2012-2017 중기국제정세전망’(이하 ‘전망’)에도 잘 나와 있다.

‘전망’은 중·미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계속되었지만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 때문에 “미국·일본의 위안화 절상압력 강화”, “미국과 중국 간 국제금융질서를 둘러싼 마찰과 긴장”이 고조돼 “군사 분야에서 미·중 양국의 갈등 가능성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향후 5년을 내다봤다.

‘전망’의 향후 5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해양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배치” → 이것이 “중국 지배층의 핵심 이익과 충돌”해 “시진핑 정권은 미국의 대중 압박에 강경노선으로 대응” → 그 결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우선, ‘전망’은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가 가져올 “미국의 아시아 중시”는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미 해군력의 60퍼센트를 이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선포에 이어, 일련의 신형 무기들이 아시아에 배치됐다.

일본 오키나와에 신형 수직이착륙수송기 오스프리 배치,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 일본 설치, 싱가포르에 미 최신형 연안전투함 배치, 대만의 미 신형구축함 구입 등.

그 결과 “향후 5년간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주된 이슈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해양영유권과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될 것이다. 특히 동·남중국해 해양영유권분쟁 심화는 역내 국가 간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시

킬” 것이다.

특히 동북아 주요 국가들에서 강경 보수 정권의 등장이 긴장을 더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다. 외교안보연구소 문건은 “[일본] 자민당이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6년 전에 중단되었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향한 제도화 작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자민당의 총선 공약은 이를 잘 보여준다. “신헌법 제정을 통한 자위권, ‘국방군’의 보유(자위대의 군대화),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등이 그 사례들이다.

‘전망’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보다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를 모델”로 지향한다고 분석하면서 북한 정부가 대중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핵무장 기정사실화”, “남한의 영향력 축소” 등을 모색한다면 동북아 정세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

제국주의적 갈등 고조

그러나 ‘전망’은 위와 같은 분석과는 모순되는 결론을 내린다. 첫째,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군사적 긴장을 제어해 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미국의 지역 역할 강화는 중국의 공세를 약화시킬 것이다.” 둘째,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안보 보장이 긴장 고조 완화 구실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은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보다 강한 보장을 통해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군비강화의 동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을 그것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완전히 모순된 주장이다. 이것은 이 나라의 지배계급이 처해 있는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 “일본과의 동맹체제에 바탕해 동아시아에서 장악하고 있는 해상패권”의 실체는 “미국이 본토 이외의 동아태 지역 전반에 대한 중국의 권력투사능력을 제한하고 봉쇄할 수 있는 군사정치적 능력”

이다(이삼성,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이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중국 이외의 동아시아 국가들을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에 포섭하여 유지하고 중국에 인접한 이들 국가들의 영토를 군사기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전략적 무기체계의 효력을 제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군사력”이다. 두 가지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중국의 해양 군사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4개 지역의 지정학적 요충지를 확고하게 장악하려 해 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개의 요충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이다. 미국의 무기수출을 통한 중국 견제 때문에 21세기 초반부터 대만 주변 갈등이 서서히 고조돼 왔다.

둘째, 남중국해다. 중국의 영해 및 영토 주권 경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지정한 ‘항해의 자유’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이다.

셋째, 알류산열도·류큐 열도 등 일본이 점령한 섬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괌에 이르는 U자 모양의 ‘미국 안보지대’다. 동북아시아의 어떤 항구로부터 상륙해 오는 군대의 집결과 출격을 저지할 공군력 및 해군력 배치가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고 미국이 판단한 지역이다. 제주 해군기지가 바로 이 U자의 한 고리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서해다. 한반도 서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에 대한 군사정치적 패권의 관문이었다. 이 지역은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과 한반도를 포함한 여타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전략적 관계를 통제하는 핵심적 요충지다. 그런 배경 속에 평택 미군기지가 확장돼 왔다.

바로 이 지역들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동맹 구축을 추구해, 중국이 반발하면서 위협천만만 갈등과 충돌이 증폭돼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군비 강화 동기가 완화”되는 결과를 낳기는커녕 군비 증강 압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강경우익 ‘핏줄’을 이어받은 박근혜·아베·시진핑 이들이 만들 제국주의 야만에 맞서자.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증가 속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빨라 1999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군비상승률이 가장 높은 10위에 속한 국가들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4개국이다(중국, 한국, 인도, 호주).

결국 ‘전망’이 말하듯이 **박근혜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과의 관계 심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보수우파와 박근혜 정

부의 대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고조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다음의 교훈을 더욱 분명하게 해 준다. 강대국 간의 지위 변동과 경제적 경쟁 강화가 지정학적 경쟁의 뇌관이 된다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제국주의 이론이야말로 현재 동아시아의 점증하는 정치·군사적 긴장의 뿌리를 해명할 열쇠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야만에 맞서는 운동 건설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김어진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공동전선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박근혜 정부와 그 동맹 세력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에게 고통전가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노동계급 정치 조직들의 분열과 위기를 이용해 ‘친북좌파’와 급진좌파에 대한 마녀사냥도 더한층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이 광범하게 단결해야 하고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동전선 전술이 중요하다.

공동전선은 1921년과 1922년에 열린 코민테른 3차와 4차 대회에서, 러시아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레닌과 트로츠키가 제안한 전술이다. 당시 공동전선이 제기된 배경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들끓던 서유럽의 혁명적 물결이 가라앉고 자본가들의 공세가 강화되자, 가능한 한 폭넓은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단결이 시급했던 것이다.

그래서 코민테른은 “공산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자들, 생디칼리스트든, 기독교

교 혹은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든, 어떤 노동자도 그들의 임금이 급속히 깎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두가 고용주의 공세에 맞서 공동전선으로 연합하자”고 제안했다.

이렇듯 공동전선은 사회주의자들과 개혁주의 세력이 우파와 자본가들에 맞서 공통의 과제와 요구(쟁점)를 중심으로 단결해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전술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하에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광범한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거듭해 왔다. 2004년 총선 직후 민주노동당은 지지율 15퍼센트의 정당이었고, 조직 노동계급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으나 2008년 분당 이후 5퍼센트 밑으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2011년 국민참여당의 무리하고 무원칙한 통합 추진과 그 후폭풍으로 지금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등으로 더 사분오열했다.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치는 ‘각자도생’

하며 더욱더 주변화됐다. 진보정치의 분열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 노동계급에까지 악영향과 패해를 낳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위기의 도래 등 정세가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진보진영의 성장에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조직의 분열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대중운동

그래서 1920년대 초 레닌과 트로츠키가 제안했듯이 각 조직의 이념과 강령, 조직을 유지·존중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동요구들을 중심으로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정치적 차이에 대한 토론과 비판은 이런 공동 행동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이 광범한 단결과 통합만 배타적으로 강조하면 대중운

동의 한복판에서 나침반 없는 항해사처럼 쏘려 다니기만 할 수 있다. 공동전선은 사회주의자들이 개혁주의 세력과 함께 투쟁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을 혁명적 정치 쪽으로 이끌기 위한 전술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자들에게 공동전선은 노동운동 진영의 단결을 추구하면서도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고 가장 적극적인 투쟁 부위가 돼 변혁적 대인의 울바름을 대중에 입증하려는 전술이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공동전선 전술을 제시하면서 “공동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완전한 정치적 독립성과 비판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해 ‘민중의힘’ 출범 과정에서 노동자연대다함계를 비롯한 급진좌파들이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연대·연합을 위해 민주당 비판을 삼가면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하자,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연대는 상호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 비판을 꺾고려워했다.

그러나 공동전선은 노동운동 조직들의 광범한 단결과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부르주아 정당(자본가 계급 내에서 부차적인 세력인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를 넘어서 전략적 동맹에 반대하는 것이고, 공동전선 안에서 사상투쟁과 전술에 대한 논쟁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트로츠키는 공동전선 전술이 실패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중의 반응을 전혀 끌어내지 못할 급진적 구호들을 내세워 개혁주의자들에게 공동투쟁을 제안하는 것”과 “당의 독자성을 희생시키고 공동전선에 참여한 조직들의 뒤공무니를 쫓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주의자들은 1920년대 초 코민테른의 유산을 적용해 독립적인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면서도 박근혜의 공격에 맞서는 광범하고 다양한 공동전선 건설에 함께해야 한다.

최영준

현대차 —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과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연대가 유지되어야 한다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지회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신규채용 모집을 강행했다. 현대차 대표이사 윤갑한은 신년 담화문에서 “비정규직노조가 터무니없는 6대 요구안 주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저들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현대차 사측은 2010년 11월 파업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5백30명에게 1백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무기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법은 철탑 농성 중인 천의봉·최병승 동지에게 각각 하루에 벌금 30만 원씩을 부과하고, 철탑 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사측은 ‘2016년까지 3천5백 명을 신규채용하겠다’며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홍보했지만, 이것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쓰레기안”일 뿐이다.

현대차 전체 비정규직은 1만 3천여 명(심상정 의원실)이고, 청소·식당·경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생산 하도급 노동자만 8천5백여 명(현대차비정규직지회 추산)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이들은 모두 불법파견이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옳다. 그런데 왜 이런 당연한 해법을 두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일부만, 그것도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돼야 하는가?

따라서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 지회가 사측의 신규채용안을 거부하며 12월 27일 교섭을 반대한 것은 정당하다. 교섭 파행의 진정한 원인은 신규채용안을 밀어붙이는 정몽구 일당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대차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며 교섭 무산의 책임을 비정규직지회 탓으로 돌렸다. 애초 사측의 3천5백 명 신규채용안에 반대한 현대차지부 지도부가 비정규직지회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에는 정규



신규채용 수용과 단계적 정규직화로의 후퇴는 우리 쪽의 정당성을 갉아먹고 노동자 사이의 반목을 낳는다.

직지부 지도부의 후퇴 조치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문용문 지부장은 12월 28일 긴급 정규직 대의원 간담회에서 단계적 정규직화와 신규채용 최소화 등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지부와 지회가 합의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6대 요구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문 지부장은 그 이전에도 요구를 후퇴시킨 바 있다.

협박

게다가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특별교섭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자신에게 일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용문 지부장도 ‘특별교섭에서 회사가 추가 제시안을 내면 연내 타결을 위해 비정규직지회가 반대해도 교섭위원 다수결로 잠정

합의하겠다’고 했다.”(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긴급성명서, 12월 27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한 주체인 비정규직지회를 제끼고 잠정합의하겠다는 태도도 불신의 원인이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1월 3일 울산 비정규직지회 정대위는 “현대차지부 교섭단에 ‘지회 동의 없는 신규채용안 잠정합의 추진 중단’을 전제로 교섭재개를 제안한다”고 결정했다. 금속노조 위원장과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공동투쟁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 금속노조가 결정한 1월 말 “총파업”도 진정성을 얻을 것이다.

현대차지부 지도부의 후퇴 조치에는 박근혜 당선이 한 요인이 된 듯하다. 문용문 지부장은 12월 25일 열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정의대책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당선으로 정치적 조건이 노동 쪽에 불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박근혜의 당선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요구의 후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채용 수용과 ‘단계적 정규직화’로의 후퇴는 지난 10년간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에게 면죄부를 주고, 전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후퇴는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긴장도 만드고 있다.

이것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사내 하도급법’ 도입을 꾀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쪽의 정당성을 갉아먹고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을 낳는 후퇴는 결코 길이 아니다. 단결을 유지하고 요구를 지키면서 투쟁의 기회를 도모해야 한다. 이미 현대차에는 잘 조직된 강력한 노동조합이 건재하지 않은가.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후퇴한 데는, 1월 7일부터 시범실시하는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한 듯하다.

실제로 일부 정규직 ‘현장 조직’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휘둘러 …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차질을 빚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문용문 집행부에 있다” 하며 집행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처럼 주간연속2교대제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대립시키는 관점은 납득할 수가 없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밀접히 연결돼 있다. 특히 지난해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에서 내준 노동강도 강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대적인 정규직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현대차 사측은 정규직 인력은 확충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만 늘려 왔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1998년 인원을 축소한 현대차는 경기가 회복되고 필요인력이 늘어난 후에도 정규직을 충원하지 않거나 사내하청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이에 따라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근골격계 질환·과로사 등 직업병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다.”(윤애림,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사는 길”, <매일노동뉴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규직의 문제기도 하다. 지금 정몽구와 사측이 야말로 주간연속2교대 투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연결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파견 투쟁과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을 결합해 정몽구 일당에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측은 비정규직지회를 고립시켜 탄압의 무기를 꺼내 들고 있다. 이 탄압에 함께 맞서는 것도 중요하다.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탄압받고 힘이 약화된다면 갈날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선·허수영 노동자연대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학교비정규직의 꿈이 깨지는 박근혜의 나라

해고를 중단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2013년 정부 예산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이 모두 삭감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게 ‘박근혜 표 민생 예산’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똑같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차별이 심해진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호봉제를 도입해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차별을 완화하라고 요구해 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연말 역사적인 하루 파업과 투쟁을 통해 이런 문제를 점증화시켰다. 그래서 호봉제 예산 8백8억 원이 국회 교과위를 통과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두 삭감해 버린 것이다.

이번 호봉제 예산 삭감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박근혜의 동일노



호봉제 예산은 모두 삭감했지만, 더 커진 노동자들의 힘을 쉽게 꺾지는 못할 것이다.

동·동일임금 적용, 공공부문부터 우선 정규직화 공약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보여 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데는 2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월급 1백만 원

수준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불가인상을 도 안 되는 월 5만 원 수준의 호봉제 비용은 그렇게도 아깝냐”며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은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예산 1백조’라고 생색내지만 부자 증세를 거부하고 다른 부문에서 예산을 대폭 빼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는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수차례 노동자들 앞에서 호봉제 통과를 약속하고서도 여당과 밀실합의 해 호봉제 예산을 삭감한 민주통합당도 믿을 만한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새 정부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노동자들이 해고 중단과 교섭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 농성을 벌이고, 방과후코디네이터 노동자들이 교육청으로 출근 투쟁을 벌이는 등 해고에 맞선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냐?”는 낙담의 목소리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조직되고 첫 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올려놓았던 것도 이명박 우파정부 때였다. 우파정부가 재집권한 상황이지만 지난 2년간 급속하게 성장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세를 쉽게 꺾지는 못할 것이다.

새로 취임한 전교조 지도부도 연대를 약속하고 있고, 여론의 지지도 건재하다. 지난해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얻은 경험과 조직, 그리고 더 커진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는 올해 투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지나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은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의 단결과 단호한 투쟁, 그리고 사회적 지지·연대였다. 올해도 이런 점들을 살려 나가야 한다.

조명지

그리스에서 나치에 맞선 단결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데이브 셀렐

그리스 활동가들이 파시스트 황금새벽당에 맞선 1월 19일 대규모 집회를 건설하고 있다.

노동조합, 시의회, 이주민단체 등과 인기 축구클럽 카르디자FC 팬 등이 집회를 지지했고 갈수록 지지가 늘고 있다. 지난달 아테네 시의회는 이 집회를 지지하는 표결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오직 우파 신민당만 지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신민당]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당과 민주좌파당을 포함해 다른 모든 정당들이 지지표를 던졌다”고 그리스 반자본주의 신문 〈노동자연대〉 편집자 파노스 가르카나스는 말했다.

황금새벽당원들은 좌파와 이주민들에 대한 폭행에 가담해 왔다. 이 당의 로고는 나치의 역만자무늬(卐) 상징을 빼닮았다.

황금새벽당은 경제 위기의 고통과 주류 정당들의 이주민 적대 정책을 이용해 지난해 선거에서 7퍼센트를 얻었다. 한 조사를 보면, 아테네 경찰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나치정당에 투표했다. 경찰은 지난 여름에 이주민 지역에서 약 8천 명을 잡아들였다.

하지만 황금새벽당에 맞선 파시스트 반대 운동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두 가지 상황을 겪으며 파시스트에 맞선 좌파 연대가 강화됐다.

반인종차별주의 국제 저명인사들이 지원한 아테네 ‘침묵시위’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에 압력을 가했다.

또, 황금새벽당원이라고 주장한 세 남자가 급진좌파 연합 시리아의 한 의원을 공격했다. “이것은 파시스트도 발이 강화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를 깨닫게 됐다”고 파노스는 말했다.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그리스인들이 오는 19일 국제 연대 집회를 제안했다.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반파시즘 운동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벌인다. 그리고 영국과 ‘파시즘반대연합’은 런던 그리스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연다.

“파시스트들의 폭력을 막고, 나치 황금새벽당이 자신들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파시스트 돌격대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중요한 행동들이 진행돼 왔다. 이 집회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 반파시스트 운동에 대한 국제 연대를 보고 싶다.

하지만 오로지 그리스에서만 국유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 전체가 그렇다. 그래서 1월 19일은 유럽 전역의 반파시즘 운동이 연대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4호 / 번역 최용찬



오는 19일(토) 그리스·프랑스·스페인에서 대규모 반파시즘 국제 연대 집회가 열린다 2012년 11월 24일 반파시즘 행진에 나선 그리스 노동자들.

출처: 반종교개혁 시대의 그리스도교

이집트 — 헌법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정국

주디스 오어

이집트 대통령 무르시는 지난달 새 헌법 승인을 놓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64퍼센트의 찬성표를 얻어 승리했다.

그러나 이는, 사람들이 헌법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투표율은 32퍼센트였고 이는 지난 6월 대선보다 한참 낮다.

인구 2천만인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는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마할라 산업단지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속한 나일 삼각주 지역의 가르비야 주에서도 반대표가 많았다.

투표를 앞두고 수도 동안 이집트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자본가와 군부의 이익을 위주로 삼는 무르시의 새 헌법에 반대했다.

수십만 명이 대통령궁을 에워쌌다. 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와 대통령궁 담벽은 반정부 낙서로 뒤덮였다. 무르시는 뚫문으로 출퇴근해야만 했다.

무르시는 이제 다시금 통제력을 회복하려 하지만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내에 갈등이 있다. 무르시가 임명한 부통령 마흐무드 메키는 지난달 사퇴했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의 지도적 회원인 사메 나기브는 이렇게 말했다. “사태 전개와 무관하게 무르시는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야당은 새로운 세력들



2년 전 이집트 혁명에 앞장선 청년 활동가들이 새 헌법에 반대하고 있다.

의 가격을 다시 올리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무르시는 투표에서 이기려고 가격 인상을 연기했다.

부정부표 의혹도 파다하다. 유권자 수천 명이 투표소를 지키던 선관위원인 판사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는데, 혁명 전에

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한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의 지도적 회원인 사메 나기브는 이렇게 말했다.

“사태 전개와 무관하게 무르시는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야당은 새로운 세력들

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로 콥트교도(이집트 토착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들이 정치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은 야당 세력의 규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동자와 빈민은 현 정권이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무르시는 이들에게 물가 인상과 긴축만을 약속한다.

이러한 새로운 저항의 물결에 노동계급이 집단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파업들이 벌어졌다.

독립노동조합연맹은 새 헌법이 얼마나 반노동계급적인지를 설명하는 유인물 2백만 장을 작업장들에 뿌렸다.

사메 나기브는 또 이렇게 말했다. “무르시가 저지른 실수는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공격이 어떤 것인지 미리 보여 준 것입니다. 예컨대 담배 가격의 대폭 인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무르시에게는 이를 밀어붙일 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가격 인상을 취소했지만 이제 다시 추진하려 들 것입니다. 이는 더 큰 저항을 낳을 것이고 새 헌법조차도 이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4호 / 번역 김종환

수만 명이 새로 나서고 있는 시리아 혁명

사이먼 아사프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의 정권은 길지만 서서히 몰락하는 길을 걷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어진 저항군의 공격으로 아사드의 군대는 많은 곳에서 퇴각해야만 했다. 아사드 정권은 결사항전 하겠다며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버티고 있지만, 사기 저하 때문에 고위급 인사의 이탈이 또다시 시작됐다.

혁명으로 등장한 무장 저항세력은 조직이 탄탄해졌다. 자유시리아군 소속 부대들은 몇몇 군사 기지를 탈환해서 상당한 양의 중화기를 확보했다.

혁명군은 지난달 수도 다마스쿠스를 비롯해 시리아 북부와 동부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쳤다. 또 혁명군은 [정부군 장교 다수가 속한 알라위파 무슬림이 많은] 서부에서도 성과를

거두면서, 아사드 정권 지지자들이 시리아를 분단시킬 가능성을 차단했다.

반란은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몇 주 새 수만 명이 인접한 요르단의 난민캠프를 떠나 성장하고 있는 시리아 남부의 혁명군에 합류했다.

아사드 지지자들은 고립되고 포위됐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파괴와 살육을 자행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혁명군의 거점인 호姆斯를 공격해 미처 피신하지 못한 2백 명 이상을 학살했다.

서방 열강과 아랍 동맹국 들은 혁명을 도둑질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새로 결성된 시리아국가연합(기존의 시리아국가위원회와 다름)은 망명자, 탈영군인, 지역 혁명위원회, 무장 저항세력의 광범한 연합을 대표한다.

서방은 시리아국가연합과도 접해 보려 하

지만 아직까지 서방은 현지 상황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서방은 또 급진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자유시리아군과 함께 싸우는 것에 기겁하고 있다.

외부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 현실이, 아사드 몰락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 시리아에서는 گیا 문제가 심각하고, 겨울철 추위도 극심하다. 그러나 이처럼 혹독한 상황에서 불구하고 민간 시민들이 조직한 혁명 위원회들이 새로 해방된 지역들을 통제하고 있다.

혁명위원회들은 이웃 나라의 난민캠프에서도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무장 저항세력과 함께 이들이 전후 시리아에서 지대한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4호 / 번역 김종환

인도의 향의 시위 물결

여성 강간과 억압에 대한 거대한 분노

이 글은 인도에서 충격적인 강간 사건을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향의 시위의 배경을 살펴 본다. 인도의 상황은 한국의 여성들이 겪는 억압적 상황도 떠올리게 한다.

자스키란 초한

12월 16일 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23세 여성이 끔찍하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인도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남성 7명이 그녀를 강간하고 쇠막대기로 신체를 훼손했다. 이후 그 여성은 전례 없는 언론의 주목을 받은 듯하다. 그러나 농촌과 빈민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강간은 모른 척하거나 은폐되기 일쑤다.

편지브 주 파티알라의 17세 여성이 그런 경우다. 그녀는 강간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접수되는 데만 14일이나 걸렸고 당시 경찰이 성희롱까지 했다. 결국 그녀는 목숨을 끊었다.

인도에서 성희롱, 여성에 대한 폭력, 강간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도의 제도와 국가에 있다.

인도의 군과 경찰은 국가에 위협적인 운동을 파괴하고자 할 때 연루된 여성을 강간하기도 한다. 낙살라이프[트지 개혁을 주장하는 마오주의 운동] 농부들이나 카슈미르 지역의 민족주의자들이 대표적인 피해자다.

정부 관료들은 흔히 강간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 옷차림이나 음주 여부

파워를 문제 삼으며 말이다.

최근의 향의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 곤봉, 최루가스를 사용했다.

그러나 사건이어난 지 2주나 지난지만 향의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위대 대다수는 정치인들이 여성의 지위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고 불신할 만큼 정치 의식이 높아졌다.

억압

강간은 인도에서 벌어지는 여성 억압의 단면일 뿐이다. ‘남아 선택’ 편승 때문에 영아 살해가 크게 늘어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단지 여아라는 이유로 낙태한 사람이 8백만 명이나 된다.

발리우드[뭄바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 인도 영화 산업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의 영화나 다른 문화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노출하는 행태가 나날이 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진보가 아니다. 오히려 성 상품화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 될 뿐이다.

일부는 강간범이 사형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 정치인, 사회 기득권층에 사형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인도 여성의 비참한 처지를 두고 서방의 식자층 일부는 인도를 여성의 지위가 가장 처참한 나라로 지목한다.

그러나 여성 문제는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는 강간범의 기소율이 충격적일 정도로 낮다. 더욱이 강간과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인도만의 사정도 아니다.

2011년, 캐나다 토론토의 한 경찰관이 ‘강간을 피하려면 옷차림에 주의하라’는 ‘홍고’를 던진 후 세계 곳곳에서는 ‘슬릿워크’ 시위가 분출했다.

인도에서 일어난 최근의 성폭력은 여성의 사회적 대우와 강간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급급히 변화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일어난 대중 시위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4호 / 번역 천형석



“여성은 섹스 심물이 아니다”는 팻말을 들고 뿌리 깊은 여성차별의 폐지를 요구하는 12월 21일 시위대

인도의 끔찍한 강간 실태

● 수도권 델리에서 14분마다 한 번씩 강간이 벌어지고 있다.

● 강간 사건은 1971년 대비 7백91퍼센트가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각각 2백40퍼센트와 1백78퍼센트 증가한 살인과 절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 강간 사건 기소율은 1971년 41퍼센트에서 2010년 27퍼센트로 추락했다.

● 강간은 신고가 가장 안 되는 범죄다. 신고되지 않는 사건이 신고되는 사건보다 50배가 많다.

● 재판은 수년에 걸쳐 더디게 진행돼 피해자를 지치게 해, 중간에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벼랑 끝에 매달린 미국 경제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오바마가 직면한 최근의 위기를 다룬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미국 경제가 “재정 절벽” 아래로 추락할 것인가? 〈소셜리스트 워커〉가 발행되는 지금 시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위기는 미국 정치권이 마비됐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버락 오바마와 의회의 공화당 반대파들이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충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마비는 더욱 놀라운 일이다.

현재 사태는, 티파티 운동의 힘으로 총선에서 낙승을 거둔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을 거부한 2011년 7월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많은 극단적 공화당원들은 ‘큰 정부’가 미국의 적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차라리 미국이 다들트를 선언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이는 정말이지 여러 가지 점에서 명징한 생각이다. 첫째, 전 중앙은행 총재 앨런 그린스펀이 지적하듯 ‘빛이 얼마든 미국은 더 강할 수 있다. 빛 값을 돈을 찍어내면’ 되기 때문이다. 달러가 세계경제의 기축통화다. 다른 나라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한, 미국은 빛이 얼마가 되든 감당할 수 있다.

빛이 감당 못할 수준의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존 위스가 계산한 것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빚지고 있는 부분을 빼면(전체의 40퍼센트쯤 된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미국의 GDP 대비 공공 부채의 비중은 다른 선진국들에 견줘 적은 편이다. 정말이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적다.”

미국 정부의 지출과 세수(稅收) 사이의 격차, 즉 재정적자가 지난 몇 년 동안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주되게 2008~09년의 대불황과 부진한 ‘회복’ 때문에 세수는 심각하게 줄고, 미국처럼 복지 제도가 열악한 나라조차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려고 지출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출은 좋은 것이다. 만약 미국 정부가 돈을 더 빌려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불황은 훨씬 심각했을 것이고 회복은 훨씬 더 미약했을 것이다.

갑부들

유럽과 미국에서 갑부들, 그들의 언론과 정치 모리배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호시절을 보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적자가 경제를 발목 잡는 큰 문젯거리라고 규정했다.

오바마와 공화당은 이 점에서 의견이 같다. 그래서 오바마는 2011년 7월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3년 1월 1일이 되면 대규모 증세와 지출 삭감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적자 폭을 줄이는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2013년에 시작될 자동적 증세와 삭감이 바로 ‘재정 절벽’이다. 재정 절벽이 일어나면 매년 전체 국민소득의 2퍼센트 정도 되는 6백40조 원 정도가 날아간다. 그 효과야 점진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실종팔구 미국을 다시 불황의 수렁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오바마는 연 소득이 2억 7천만 원 이상인 부유층에 대한 생색내기 수준의 증세를하려 한다. 그 대가로 사회보장제(연금), 메디케어(노년층 대상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빈곤층 대상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가장 중요한 연방정부 복지 지출을 삭감하면서 말이다.

이런 복지 축소 패키지는 미국 핵심 대기업들이 바라는 바와 거의 일치한다. 이런 조처는 미국 복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정도는 아닐지만 상당히 축소시킨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공화당 하원의원은 어떤 증세도 반대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의장 존 보너가 낸 합의안조차 거절함으로써 증세에 대한 어떤 수준의 논의도 흙탕물을 끼얹었다. 이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미 의회가 2008년 은행 구제를 거부했을 때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논평가들은 이제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것이 오바마와 공화당으로 하여금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라 본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현실적 조건은 썸바빌 종인 정치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합의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 협상 테이블에 미국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34호 / 번역 김인수



부채 상환 중단, 은행 국유화,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담은 배너를 들고 행진하는 안타르시아(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 대열 2010년 5월 파업 사진.

다시 듣는 〈맑시즘2012〉 ④

오늘날 그리스의 경제·정치 위기와 저항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SEEK)의 활동가인 **소티리스 콘토아니스**가 2012년 7월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하는 〈맑시즘2012〉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콘토아니스가 2012년 7월 27일에 강연한 ‘오늘날 그리스의 경제·정치 위기와 저항’을 녹취한 것이다. 해가 바뀌어도 유로존 위기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이 글은 그리스의 경제·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2년] 6월 17일 그리스 총선 2차 투표에서 보수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 상황을 고려하면, 현 연립정부는 두 전임 정부 — 파판드레우 정부와 파파데모스 정부 — 보다도 훨씬 약하다. 우리는 지난해[2011년] 10월 거대한 파업과 시위의 힘으로 파판드레우 정부를 몰아냈다. 또, 우리는 올 2월에 파파데모스 정부를 몰아냈다.

6월 선거 이후 금융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리스를 뒤흔든 정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무도 이 정부가 4년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현 정부가 약한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경제다. 그리스와 유럽의 경제 위기는 악화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도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2013년 세계경제가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유로존이 붕괴하면서 그리스 지배자와 정당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둘째는 저항이다. 지난 2년 동안 그리스에서는 총파업이 20여 차례 있었다. 그리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총파업뿐 아니라 크고 작은 파업, 정부 청사 점거, 공장 점거, 경찰과의 충돌 등이 무수히 많이 벌어졌다.

셋째 이유는 좌파의 힘, 특히 혁명가들의 힘이다. 내가 혁명가들의 힘을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선거에서 시리자는 20퍼센트를 얻었고, 반자본주의 연합인 안타르시아는 1퍼센트도 못 얻었다. 그러나 혁명가들이 현 정부가 처한 최대 장애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좌파에게 중요한 것은 의회 내 힘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와 노동자 운동 내 힘이다. 거리와 노동자 파업들에서는 시리자보다 안타르시아가 더 중요했다.

이제 이 세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하겠다.

그리스 경제는 붕괴하고 있다. 올해[2012년] 그리스 GDP는 7퍼센트나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 동안 비슷한 속도로 경제가 추락했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

업률’은 23퍼센트다. 그러나 ‘비공식 실업률’은 훨씬 높다.

또, 아직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빈곤이 퍼지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은 30퍼센트나 줄었다. 연금은 더 많이 깎였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빈곤 때문에 매주 10명이 자살한다.

최근 유명한 사건은 75살의 노인 디미트리스 크리스톨라스의 자살이다. 그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살했다. 그의 주머니에서 “살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삶보다는 죽음이 더 낫다” 하고 쓰인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자신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당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는 이런 재앙에 대한 책임을 노동계급에 묻고 있다. 독일 노동자들을 공격하기로 유명한 독일 신문 〈빌트〉는 그리스 노동자들이 게을러서 이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빌트〉는 그리스 노동자들이 태양 아래 누워 있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신 독일에서 빌린 돈을 갚고 먹고 살았다는 것이다.

타살

독일 총리 메르켈도 비슷한 말을 했다. 메르켈은 ‘그리스는 이제 숙제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트로이카가 요구하는 모든 신자유주의 정책 — 대규모 민영화, 공무원 15만 명 해고, 연금과 임금의 추가 삭감 — 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로이카는 그리스 경제의 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의 물가와 임금을 대폭 내려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2002~08년 그리스는 경제 기적의 사례로 꼽혔다. 당시 그리스 경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보다 2~3배 빨리 성장했다.

투자자들은 이 ‘경제 기적’에서 한몫 잡으려고 그리스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했다. 당시 불과 5년 동안 그리스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3백60억 유로에 달했다. 당시 유럽연합에서 그리스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또 다른 ‘경제 기적’인 아일랜드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아일랜드는 포르투갈, 그리스와 함께 IMF의 손아귀에 있다. 따라서 문제는 경쟁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둘째, 그리스 노동자들은 게으르지 않다. 사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유럽의 어느 나라 노동자보다 오래 일한다. 그리스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 시간에 달한다. 독일은 1천4백 시간이다. 또, 불황을 4년간 견뎌음에도 그리스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29번째로 부유한 나라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여전히 엄청난 양의 부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특별 사례라고도 주장한다. 스페인은 은행이 문제인데 반해 그리스는 국가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스 국가가 노동자와 사회에 너무 많은 돈을 공짜로 줬다는 주장이다.

그리스의 공공부채는 GDP의 1백60퍼센트나 된다. 그러나 빛이 이렇게 많은 것은 노동자들에게 돈을 공짜로 줬서가 아니다. 그리스 국가는 사장들, 특히 은행들한테 많은 돈을 지원했다.

2008년 10월에 그리스 은행들은 국가한테서 2백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현재 은행들에 대한 지원금 액수는 누적 1천억 유로에 달한다. 게다가, 은행들은 추가로 5백억 유로를 지원받을 것이다. 이 점은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 국가는 민간 부문을 구제하려고 돈을 퍼부었다. 바로 이것이 엄청난 부채 문제를 초래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는 전혀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그

리스 경제가 붕괴 중인 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서도, 노동자들이 게을러서도 아니다. 원인은 세계경제 위기다.

트로이카의 안정화 계획은 그리스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을 때 국가 부채는 GDP의 1백20퍼센트였다. 그러나 지금은 1백60퍼센트다. 구제 계획의 목표는 그리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런 구제의 목적은 위기가 다른 유로존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이 전략은 철저히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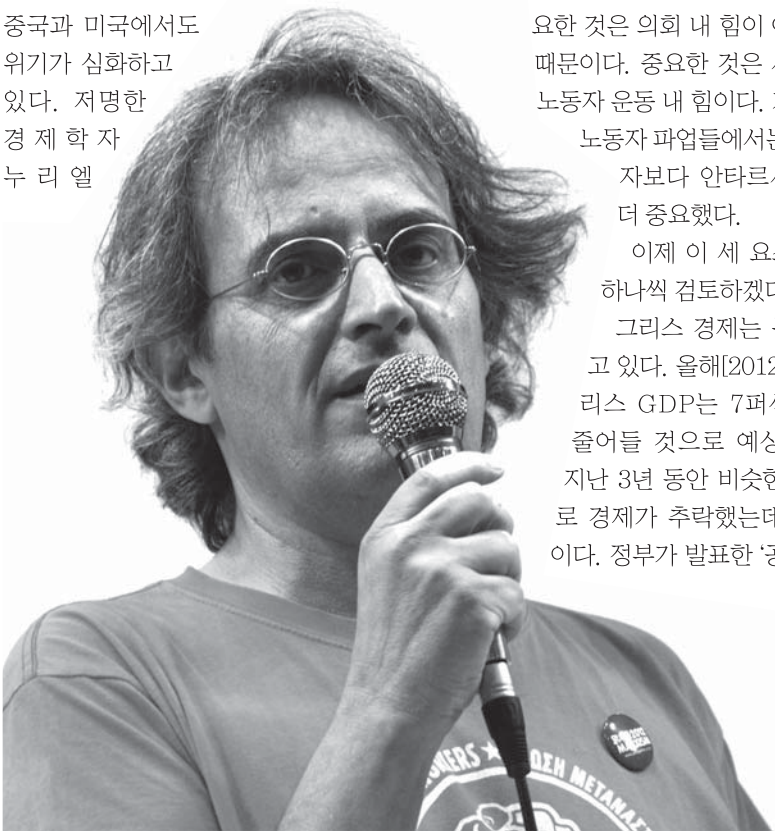
단지 위기가 스페인으로 확산됐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는 소국이다. 그리스 GDP는 유럽연합의 1.5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페인은 유럽연합에서 4번째로 경제가 큰 국가다. 이탈리아는 3위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2조 유로에 달한다.

만약에 이탈리아가 유로존 위기로 빨려 들어가면 유로존이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탈리아 정부는 8월 14일로 예정했던 채권 입찰을 연기했다. 은행들이 채권 매입의 대가로 요구할 이자율이 너무 높아 이탈리아의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다시 그리스 얘기로 돌아오면, 위기가 심화하면서 현 정부는 운신의 폭이 크게 줄었다. 현 정부는 정치적으로 정권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약한 이유 중 두 번째 이유, 즉 그리스 노동계급의 힘으로 바로 연결된다.

지배계급은 두 전임 정부를 무너뜨린 그리스 노동자 운동을 패배시키지 못했다.

6월 선거 결과도 그리스 노동자 운동의 힘과 노동자들의 반격 의지를 보여 줬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지배자들은 그





2010년(위), 2012년 10월(아래) 반 긴축 투쟁 지난 2년 동안 스무 차례나 총파업이 벌어졌다.

리스 민중과 노동자들에게 겁을 주려 노력했다. 그들은 '만약 네가 좌파를 찍으면 그리스가 망할 것이고 너도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 정부만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다. 독일 총리 메르켈, IMF 총재 라가르드를 비롯해 이른바 '국제사회'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라가르드는 '만약 그리스 사람들이 좌파를 뽑으면, 그리스를 나이지리아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아주 고약한 말을 했다.

그래서 그리스 노동자와 민중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찍었다. 그들은 좌파, 특히 시리자에 표를 던졌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시리자한테만 표를 주지는 않았다. 좌파 진영 전체가 38퍼센트의 표를 얻었는데, 이것은 그리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수도 아테네의 노동계급 주거지역을 보면, 이 지역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좌파를 찍었다.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하자, 노동자들은 사장들에게 전쟁을 선언하는 것으로 응수한 것이다.

그러자 그리스 대중매체들은 뒤늦게 이 선거 결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사람들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시리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좌파 내에서 일부가 이 논리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시리자만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급진 좌파 진영에서 좀더 왼쪽인 안타르시아나 그리스 공산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시리자를 찍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리스 공산당은 최근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표를 50퍼센트나 잃었고, 안타르시아는 75퍼센트를 잃었다.

그러나 노동계급 운동과 선거 결과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좌파 진영 전체의 득표율이 크게 올랐는데, 자기 당의 득표율이 줄었다고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동시에,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혁명적 좌파의 영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시리자는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시리자는 최근 선거 운동에서 거의 모든 급진적 구호들의 사용을 중단했다.

5월 6일 선거에서 시리자는 '유럽연합이 강요한 긴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6월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일방적 행동을 취하지는 않겠다'며 금융시장과 지배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긴축안 폐기 약속은 '트로이카와의 협상'으로 바뀌었다.

트로이카

그럼에도 사람들이 시리자에 표를 던진 것은 그들 자신이 우경화하거나 시리자의 온건 노선을 수용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시리자의 우경화와 온건화에 상관없이 표를 던진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반자본주의 좌파, 혁명과 계급 전쟁을 지지한다.

6월 17일 선거 이후 지하철 노동조합 선거가 있었다. 지하철 노조는 지난 2년 동안 무수히 많은 파업을 벌인 매우 전투적인 노조다. 이 선거에서 안타르시아 후보들이 압도 다수로 당선했다. 지하철 노조 위원회의 11개 의석 중 6개가 안타르시아 후보에게 갔다.

지배자들은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잘 알고 있다. 시리자는 자신한테 표를 던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지배자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것은 시리자를 노린 것이 아니라, 총파업을 20회 벌이고 두 개의 전임 정부를 무너뜨린 그리스 민중을 노린 것이었다. 겁을 집어

사람들이 시리자에 표를 던진 것은 그들 자신이 우경화하거나 시리자의 온건 노선을 수용해서가 아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반자본주의 좌파, 혁명과 계급 전쟁을 지지한다.

먹은 지배자들은 이제 운동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한다.

여러분은 황금새벽당에 관해 들어 봤을 것이다. 황금새벽당은 나치 정당인데, 이번 선거에서 7퍼센트를 얻었다. 이제 황금새벽당은 의회 내 힘을 이용해 이주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지배계급과 정부는 기꺼이 이들과 손을 잡고서 노동자 운동을 파괴하고 국가 전체를 우경화시키려 한다.

오늘 발표의 결론을 말하겠다. 그리스는 오랫동안 활화산이었다. 앞으로도 활화산일 것이다.

그리스 정부는 약하다.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좌파 운동은 매우 강력하다.

과거 그리스에서 좌파들이 지금과 가장 비슷한 결과를 얻었던 것은 1950년대였다. 1958년 그리스에서 공산당이 불법이었을 때 시리자와 비슷한 성격의 당인 '민주좌파연합'이 28퍼센트의 표를 얻었다.

오늘날 그리스 지배자들은 그 때와 동일한 수단을 사용해 이 문제에 대처하려 한다. 그들은 파시스트 집단과 민병대를 조직해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겁주는 데 실패했다. 1965년 대학과 작업장 등에서 투쟁이 계속됐다. 그 해 민중은 두 번이나 정부를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싸웠지만 민주좌파연합의 간부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려 했다. 그들은 오늘날 시리자가 그러듯이 존경받고 책임 있는 아당이 되려 했다. 사람들은 분노해 민주좌파연합 간부들을 '노바겐'이라고 불렀다. 노바겐은 1960년대 유명한 진통제였다.

민주좌파연합은 자신이 존경받고 책임 있는 좌파가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진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는커녕 쿠데타가 일어났다. 1967년 그리스에서 독재 정부가 집권해 운동을 탄압했다.

오늘날 그리스 노동자들은 계속 싸울 것이다. 이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시리자에 의존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진통제에 의존해 승리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반자본주의 좌파가 중요하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파업과 시위 등을 조직하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우리는 또한 반자본주의 정치 강령을 통해 노동자들의 반격에 힘을 실어 줬다.

다른 정당과 달리 우리는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래로부터의 디폴트'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리스가 즉각 유로존을 떠나야 하며, 은행과 대형 기업 등을 노동자 통제 아래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노동자 운동에 큰 힘을 줬다. 안타르시아는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며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도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이 투쟁의 승패는 그리스 한 나라에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투쟁도 이 투쟁의 일부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하다. 우리는 그리스와 한국에서 혁명적 세력이 돼야 한다.

정리 발언

황금새벽당에 관한 질문들에 먼저 답하겠다. [황금새벽당이 7퍼센트를 얻었지만] 그리스인 7퍼센트가 나치인 것은 아니다. 황금새벽당은 작은 조직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혼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7퍼센트를 득표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황금새벽당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예컨대, 아테네 경찰 중 50퍼센트가 황금새벽당에 투표했다. 따라서 황금새벽당은 진정한 위협이다.

문제는 그것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지를다.

우리에게는 공동전선의 전통이 있다. 우리는 안타르시아, 시리자, 그리스공산당과 나치에 맞서 싸우려는 모든 세력을 포괄하는 강력한 반파시즘 운동을 건설할 것이다.

이 점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이 제안해 '반인종차별주의·반파시스트폭력연합'이 결성됐다.

이 조직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아테네에서 1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안타르시아, 시리자, 그리스공산당, 아나키스트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행진했다.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테네 인근 니키아아에서 파시스트는 강력한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시도해 왔다. 일부 이 지역 경찰관이 황금새벽당 소속이다. 황금새벽당 회원들은 이주민들을 직장에서 내쫓으려고 이주민들이 일하는 상점에서 손님들을 위협하거나 이주민들이 소유한 상점들을 위협했다.

그래서 우리는 항의 시위를 조직하는 모임을 열었다. 5백 명이 이 모임에 참가했고 1천 명이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 그러자 파시스트들은 난리가 났다. 언론에 누설된 그들의 이메일과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 지역에 발붙이고 살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날 비상상황에 처했으니 모두 모이랴'고 호소했다.

그들은 겨우 1백50명을 모았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자기네 사무실에 숨거나 경찰들의 보호를 받았다. 이것은 매우 좋은 사례다. 모든 좌파 세력이 이날 시위에 참가했다.

안타르시아에 관해 말하겠다. 어떻게 안타르시아가 그렇게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면서 단일한 선거 정당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해 많은 질문이 있었다.

안타르시아는 2009년 1월에 결성된 매우 젊은 연합이다. 현재 안타르

시아 안에는 몇 개의 극좌파 조직과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았던 독립적 좌파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안타르시아를 창당하기로 결정한 것은 2008년 반란 이후였다. 반란의 발생 원인은 경찰이 15살 소년을 사살한 것이었다. 그 뒤로 거의 한 달 동안 대규모 항쟁이 발생했다. 당시 <파이낸셜타임스>는 이것이 경제 위기 시대 최초의 반란이라고 옮겨 평가했다.

안타르시아

물론, 안타르시아 내 조직들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이 존재한다. 예컨대, 황금새벽당 문제를 보자.

안타르시아 내 조직들의 다수는 파시스트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안타르시아 내부에서도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선거 전술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있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시리자의 당선을 위해 6월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은 내부 논쟁에서 우리 의견을 관철할 수 있었다. 이런 논쟁들에서 이기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시리자에 대한 질문에 답하겠다. 물론, 시리자는 사민주의보다는 왼쪽에 있다. 그러나 시리자는 처음부터 디폴트에 반대해 왔다. 시리자는 그리스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좌파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리스 민중은 부채에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또, 시리자는 시종일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반대해 왔다. 시리자는 개혁주의 정당이다. 개혁주의자로서 시리자는 간접적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국'을 걱정하며 그리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리스에서 혁명적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엄청난 모순과 정치적 위기들을 고려하면 이 다음에 거대한 반란과 혁명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분명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고리다. 그것은 그리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녹취·정리 김용욱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래로부터의 디폴트'입니다."

영화 <레미제라블>과 프랑스 혁명

노예의 삶을 거부해 온 끈질긴 저항

영화 <레미제라블>("비참한 혹은 극빈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원작은 빅토르 위고의 1862년작 장편소설이다. 땡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가난 때문에 몸을 팔아야만 했던 판틴, 여관에서 하인 생활을 한 코제트 등 비참한 사람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따뜻한 연민의 눈으로 그렸다.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 혁명을 이끈 부르주아 세력의 일부였다. 그는 사회의 진보를 확신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있었다. 물론 그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이해하고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그의 사상 이상의 것들을 보여 줬다.

그래서 당시 소설 <레미제라블>이 출판됐을 때 노동자들은 돈을 각출해서 이 책을 구입하고 돌려 읽었다고 한다. "주머니에 12프랑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 책을 샀고 제비를 뽑아 읽고 난 뒤 이 책의 주인을 정했다."

영화 <레미제라블>의 하이라이트는 바리케이드 장면이다. 라마르크 장군의 장례식에 맞춰 공화파 학생들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저항한다. 그러나 봉기는 패배했고, 이들은 모두 총탄에 쓰러졌다.

그러나 파리의 시민들은 이들의 죽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영화는 파리의 시

민들과 죽은 혁명가들이 모두 모여 더 큰 바리케이드에서 혁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이 난다.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돼 울릴 때/ 내일이 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리라."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이 노래(Do you hear the people sing?)는 중국 천안문 항쟁 때도 시위대 속에서 애창됐다고 한다.

혁명과 반동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된 19세기 프랑스 역사는 승리와 패배, 혁명과 반동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역사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억압받던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선 위대한 사건이었다. 이 혁명으로 절대왕정과 봉건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과 내전으로 혁명은 반동의 위기에 처했고, 결국 1799년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좌에 올랐다(제1 제정). 그럼에도 나폴레옹 정권은 혁명이 가져온 변화(부르주아의 목표)들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세워졌다. 이 때문에 나폴레옹의 군대는 한동안 중간계급의 지지를 받으며 유럽의 많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다.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자 유

럽에서는 모든 국왕·제후·귀족이 복귀했다. 프랑스에서도 1815년에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복귀한다. 18세기 구체제의 낡은 상부구조가 이미 바뀐 사회구조에 뒷받침된 것이다. 1815년은 영화 <레미제라블>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해다.

루이 18세와 샤를 10세의 왕정복고는 반동의 시기였다. 샤를 10세는 가장 부유한 선거인들이 투표를 두 번 할 수 있는 이중투표법을 통과시키고, 소르본 대학에서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라고 판단된 강의를 중단시켰다.

결국 1830년 7월 파리에서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으로 샤를 10세는 몰락하지만, 그 자리는 오를레앙의 루이 필리프가 차지했다.

7월 혁명은 프랑스 역사에서 노동계급의 등장을 선명하게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다. 부르주아는 구 특권계급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려고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샤를 10세를 몰라나게 한 전투인 '영광의 3일'에서 파리 노동자들의 참가는 결정적이었다. 노동자들이 혁명에 가담한 것은 그들의 조건이 개선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감은 왕조가 교체됐다는 것으로는 충족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경제 위기가 지속되

면서 사람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1831년 리옹에서 견직공들이 일으킨 봉기는 프랑스에서 대중적인 노동운동이 나타났음을 알리는 최초의 사건이었지만, 탄압으로 분쇄됐다. 폴레라가 유행해 파리에서만 2만 명이 사망했다. <레미제라블>의 1832년 6월 반란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였다.

1848년 혁명

7월 혁명이 남긴 미완의 과제 때문에 1848년 혁명이 일어났다. 1848년 2월, 민중은 왕정의 전제적 권력 종식, 투표권 확대, 선거를 통한 의회 설립, 언론의 자유 등을 요구하며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왕정이 타도되고 제2공화정이 수립됐다. 성인남자의 보통선거권도 도입됐고, 노동시간 단축, 국영 작업장 건설 등 개혁이 단행됐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색 노동자 알베르가 정부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르주아들은 이런 개혁에 불만을 가졌고, 개혁들을 물리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유럽 전역에서 민주개혁 운동은 구체제의 지배 세력에 맞서 서로 다른 계급들의 이해관계를 통합시켰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주로 노동자들이었고, 이

들의 요구는 왕정 지지자뿐 아니라, 지주, 상인, 변호사, 그리고 중간 계급 공화파 학생들에게조차도 너무 나아간 것이었다.

결국 6월의 전투에서 노동자들은 패배하고 다시 구질서가 부활한다. 나폴레옹의 조카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황제가 됐다(제2 제정). 1848년 봄의 커다란 희망은 1849년 초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1848년 6월 봉기는 프랑스 사회가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두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줬다.

이제 부르주아 계급은 더는 혁명적 세력이 아니었다. 그들은 노동계급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의 민주주의 혁명도 회피하려 했다. 1848년 혁명을 보면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슬로건이 연속 혁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23년 후, 프랑스에서는 또 다시 위대한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난다. 1871년 파리 코뮌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권력인 노동자 권력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 줬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진보한다. 프랑스 혁명사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끈질긴 민중의 저항의 역사였다.

성지현



자본주의야말로 지구를 불사르는 방화범



요즘 날씨가 매섭게 춥다. 최저기온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갱신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강추위는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은 것이, 북반구에는 극심한 강추위로, 남반구에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가 인간에게 역습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강추위뿐 아니라 잦아지는 이상기후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다양한 생물들의 멸종 등 온갖 끔찍한 일들이 설 새 없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경제 시스템대로 가다간 조만간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당신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봤다면 이 책을 꼭 읽어 봐야 한다.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온갖 거짓말들로 현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속이려 한다. 그러나 저자는 수많은 최근 사례들을 들어 환경오염이 지구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한 경계선을 "이미 넘어서서 지구 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자본가들이 벌이는 이윤 축적을 근본 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야말로 숲을 불사르는 방화범이요, 우물에 독을 푸는 살인범이라는 것을 생생히 폭로한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된 세계다. "농업은 식량 생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윤에 관한 것이다. 식량은 여기서 나오는 덤일 따름이다. 보건 서비스는 하나의 상품이다. 건강은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다수의 현실적인 필요에 기반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지구에서 인간이 천년만년 계속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너무 몽상적이다.

이런 비판을 맞닥뜨린 많은 기업들이 "녹색성장"을 말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얘기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한다. "석유를 넘어서"라는 슬로건을 건 영국 석유기업 BP는 도



《환경주의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모든 것》 존 벨라미 포스터 외 지음, 황정규 옮김, 삼화, 1만 5천 원, 2백72쪽

리어 석유 시추를 공격적으로 확대했고, 미국의 월마트는 점포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해 놓고는 9퍼센트나 더 배출했다. 저자는 이를 두고 자본가들이 "녹색 분칠"을 하는 것이며 이윤과 환경이 대립할 때 결코 환경을 선택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어떤 제안들도 회계장부의 가장 하단에 있는 순이익, 즉 이윤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기에 저자는 '민중의 필요에 의한 민중들의 직접적인 계획경

제'야말로 우리가 이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얘기한다.

많은 환경운동가와 청년 들이 코펜하겐 유엔기후회의나 교토의정서의 실패 등에서 드러난 선진국들의 무능함과 위선을 보며 기존 체제에 도전할 필요를 느낀다.

체제를 바꾸자

'기후가 아니라 체제를 바꾸자'는 구호가 터져 나온 2010년 코차밤바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는 이를 반영하는 동시에 전 세계 환경운동에 새로운 급진화 분위기와 신선한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으로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민중의 필요에 의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주의자들이라면, 이 책에서 계획경제 사례로 소개하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등의 모순도 함께 봐야 할 것이다.

볼리비아 대통령 모랄레스는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한 당사

자이기도 하지만, 2011년 아마존 보존 구역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을 다국적 기업에 허가해 주교 이에 저항하는 아마존 원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을 진압하기도 했다.

계획경제는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 사회주의의 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열쇠인 노동계급 스스로의 행동으로 이뤄낼 수 있다.

또한 계획경제는 세계의 어떤 부분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맞물려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태업들 중 어느 하나만 반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끼운다면 그 태업만 짜부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지만 이를 자본주의와 연결시키지 못한곤 한다. 이 책은 환경 문제에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를 겨누도록 돕는 가능자 구실을 한다.

양효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계급

박근혜 시대에 민주주의는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철 지났다'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이미 완료된 과제인 것처럼 오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우파 집권이 곧 군사독재로의 회귀를 뜻하기라도 하는 듯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오류를 피하면서 사태를 냉철하게 파악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갖는 속성을 역사적·이론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에 친화적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상식처럼 퍼져 있다. 실제로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어느 정도 역사적 관련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약하다.

봉건제 하에서 부르주아지는 봉건 귀족에게 종속돼 있었다. 당시에 부르주아지는 이미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수적으로는 소수였다. 그래서 봉건 귀족에 맞선 자신들의 투쟁에 다른 사회 세력들을 끌어들이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이 봉건 귀족을 제외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들은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 당하는 계급 사이의 이해관계 갈등을 은폐하려고 "자유, 평등, 박애" 같은 추상적이고 보편 타당해 보이는 수사들을 동원했다.

이렇게 해서 하층 계급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던 부르주아지가 결국 승리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가 약속했던 인간의 "보편적" 권리들은 실제로는 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독립 선언문이 규정한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 권리"가 흑인과 원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보통선거권도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 부르주아지들은 적어도 19세기까지는 보통선거권을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요구로 치부했다. 독독이 제 발 저리듯, 그들은 가진 것 없는 대다수 인민이 투표권을 얻게 된다면 결국 쪽수를 앞세워 사유재산을 철폐할 것이라며 지레 겁을 먹었다. 19세기 영국 휘그당의 역사가였던 백컬리는 "보통선거권은 문명의 존립과 결단코 양립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보통선거권을 쟁취하는 일은 노동계급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것은 실로 기나긴 투쟁이었다. 1838~59년의 차티스트 운동, 1848년 유럽을 휩쓴 혁명, 1871년 파리 코뮌, 20세기 초의 여성 참정권 운동, 1950~60년대 미국 공민권 운동, 그리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아랍 혁명에 이르기까지...

1900년까지도 주요 자본주의 국가 17곳 가운데 온전한 의미의 보통선거권이 도입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독일(1919년), 영국(1918년) 등지에서 성인 남녀 모두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러시아 혁명을 필두로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유럽을 뒤흔든 반란의 물결 덕분이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노동3권 등 보통선거권과 한 묶음을 이루는 현대 민주주의의 여타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진위를 거듭해 온 살벌한 전투를 거쳐 달성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달성되고 있거나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현대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에 맞선 무산계급의 투쟁으로 얻어낸 값진 성과물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지가 당장 눈앞의 노동계급 투쟁에 떠밀려서만 민주주의를 '양보'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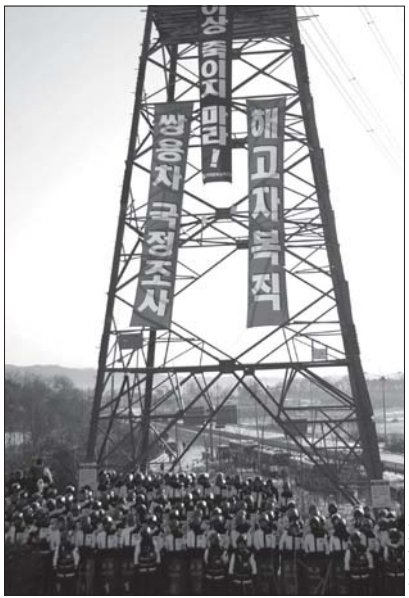
30년 무바라크 독재를 단 몇 주 만에 날려버린 이집트 노동계급 노동계급의 조직적인 힘아말로 민주주의를 실제로 보충해 주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에서 유권자 층을 본격적으로 확대한 2·3차 선거법 개정은 차티스트 운동이 패배하고 한참이 지난 1867년과 1884년에 이루어졌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민주주의가 지배자들의 기득권을 크게 위협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민주주의는 반체제 세력들을 온건하게 길들이고 불평등한 사회 질서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더욱 공고화 해주는 효과마저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민주주의를 더욱 억압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바로 현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인민(demos)의 지배(kratia)를 뜻한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그것이 가장 발달된 곳에서조차 인민의 지배를 결코 실현하지 못한다. 마르크스의 표현처럼, 현실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언제나 "부르주아지의 독재"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가장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나 정부조차도 사회의 부를 생산하는 주요 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는 못한다. 그러한 부의 생산수단은 대부분 선출되지 않은 자본가들의 손에 남아 있으며 자본주의적 경쟁의 법칙에 따라 운영된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선출된 정부들은 자본가 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을 감히 시도하지 않는다. 설령 시도하는 정부가 있다고 해도 자본가들은 투자 중단, 폐업, 자본도피, 환투기 공격 등으로 해당 정부를 손쉽게 무릎꿇릴 수 있다. 프랑스아 미테랑, 빌 클린턴, 우고 차베스, 노무현 모두 이런 공격의 표적이 된 바 있다. 오직 차베스만이 어느 정도 굴복하지 않고 버텼다.

둘째, 선출된 의회는 선출되지 않은 군부, 경찰, 검찰, 법원, 경제 부처 등과 나란히 공존한다. 이 국가 기관들은 온갖 사회·경제·이데올로기적 끈으로 부르주아지와 연결돼 있다. 사실 국가 관료들의 이해관계는 자기 국가의 대내외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는 결정적으로 자국 기업들의 덩치와 경쟁력에 달려 있다. 그러므

로 국가 관료들의 이해관계와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는 근본에서 겹친다. 이 국가 관료들은 정부 정책의 실행뿐 아니라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군부가 나서서 선출된 정부를 제거할 수도 있다.

셋째,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언론과 교육 시스템은 경제 성장 논리, 국가 안보 논리 등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대중에게 주입하며, 정치 무대에서도 이런 이데올로기가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수용해야 할 전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노동계급 정치 세력은 선거를 포함한 정치 과정 전반에서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과소대표

넷째, 자본주의에서의 삶이 워낙 고되고 삭막한 탓에 일상적 시기에 노동계급과 빈민 대중의 상당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다.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투표율이 훨씬 낮은 것도 그 때문이다. 즉 1인 1표 시스템하에서도 사실상 노동계급의 표는 과소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선거 제도는 하나같이 유권자들의 수동적 역할에 의존한다. 유권자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고립된 개인으로서 투표할 수 있을 뿐, 일단 선출된 대표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들을 집단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 반면 선출된 대표들(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인민의 지배'를 뜻한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그것이 가장 발달된 곳에서조차 인민의 지배를 결코 실현하지 못한다. 마르크스의 표현처럼, 현실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언제나 "부르주아지의 독재"였다.

등)은 평범한 유권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사회·경제적 특권을 누린다. 따라서 이들은 너무나 쉽게 기득권에 포섭(그들이 이미 기득권층이 아니라면)돼 노동계급 유권자들을 배신하게 된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은폐하는 장막 구실을 한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이런 장막조차도 때로 거추장스러워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결코 위협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노동계급과 기타 피억압 민중에게 부르주아지에 맞선 저항을 조직할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회의 지배자들은 선불리 민주주의의 장막을 찢어발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동의에 의한 지배'의 이점을 잘 알고 있으며 노골적인 독재를 전면에 내세우려다가는 자칫 거대한 반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부르주아지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가 결합된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저항을 분쇄할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노골적인 독재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전가할 필요성이 절박해질수록 이에 대한 일체의 불만 표출을 단속할 필요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18대 대선에서 한국의 지배계급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전례없이 대동단결한 것은 이처럼 깊어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전보다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의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 점에서 경제 위기가 가장 첨예한 곳인 유럽의 상황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2011~12년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이른바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정부가 집권한 바 있다.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해 취해야 할 가혹한 긴축 정책들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황금새벽당, 프랑스의 국민전선 등 파시즘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처럼 경제 위기의 시대에 필연적으로 들어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 맞서 최선두에서 싸워야 한다. 민주당 같은 민지 못할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과도 때때로 함께 싸우되 그들과 독립적으로, 특히 노동계급의 주도적 행동을 독려하며 싸워야 한다. 노동계급의 투쟁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대·심화돼 온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민주주의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전경록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2013년 1월 23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비정규교수노조 파업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분회 파업 선포 기자회견 시간강사들은 전임 교수의 10분의 1도 안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5개 분회(경북대, 영남대, 전남대, 조선대, 부산대)가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조 역사상 최초로 동시파업을 벌이며 혹은 한 속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지난달 20일 파업을 선언한 뒤 시간강사 4백여 명이 성적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임금 문제다. 많은 대학들이 고액등록금 인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대처하려고 시간강사 등 비정규교수의 임금을 동결하면서 비정규교수들의 임금이 사실상 삭감되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1~2개 대학에서 강의의를 담당하며 연봉 1천만 원가량의 저임금에 시달린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시간강사 임금 인상안을 전년보다 1만 원 오른 시급 7만 원으로 제시했지만, 상당수 국립대가 이조차 지키지 않았다. 파업에 들어간 네 국립대 분회의 시간강사료는 5만 2천 원~6만 5천 5백 원이다.

고용 불안도 주요 쟁점이다. 학기별로 15~16주 고용되고 “문자 통보조차 없이” 조용히 해고되는 시간강사들의 고용불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학과 통제합, 졸업이수학점 축소, 소규모 강의 축소, 최대 수강인원 확대, 전임교원 담당 시수 증가 등으로 교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교과부의 책임전가식 대학평가와 시간강사법 개정이 이런 추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대학들은 비용 절감과 통제 강화를 위해 시간강사를 수시로 해고하는 한편, 정규직 대신 1~2년짜리 계약직 교수들을 크게 늘리고 있다.

영남대는 올해부터 ‘교책직원교수’(9학점 이상 강의하는 계약직 교수)를 대거 늘리려 한다. 조선대는 학과 통폐합을 시도하면서 전임교원 책임 강의 시간을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렸고, 총장직선제 교수로 교과부의 재정지원이 삭감된 전남대도 전임교원들의 수업시수를 늘리려 한다. 그렇게 해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려는 것이다.

대량해고

대학들은 “돈이 없다”며 저임금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를 정당화하지만, 대학 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는 비정규교수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글로벌 역량’ 강화 운운하는 것은 위선 아니면 허풍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경쟁과 소외를 심화시켜 대학의 교육과 연구 전반을 왜곡한다.

- 파업 농성장을 방문하거나 연대의 메시지와 모금을 보내 주세요.
국민은행 805501-01-383250(예금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문의: 053-854-5768/ kipu@hanmail.net
- ‘2012 임금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2013년 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교과부) 후문 앞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최근 몇 년간 성적입력 거부 전술을 사용해 파업을 성공적으로 벌임으로써 조합원 수와 결속력 강화 등 조직이 성장해 왔다. 비정규교수들의 파업으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7개월 넘게 협상에 응하지 않던 대학들이 압력을 받기 시작했고, 영남대분회가 1월 4일 의미있는 양보를 얻어내 임단협을 타결지었다. 영남대는 최근 박근혜 측근이 총장에 임명돼 2월 1일 취임을 앞둔 상태에서 이 파업이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자 부담을 크게 느낀 듯하다.

나머지 분회도 단호하게 파업을 지속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남은 이들이 굳건하게 싸울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연대, 특히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학생과 교직원)의 연대가 중요하다. 비정규교수노조는 파업투쟁의 승리를 위해 대학별 파업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 두 차례 교과부 앞 기자회견과 집회 등 상경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정진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KT의 민주파 활동가 탄압

이해관·유덕상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하라

KT 사측이 ‘사규 위반’ 등을 이유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는 명백히, 이해관 위원장이 회사의 잘못을 폭로해 온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사측의 낙하산 인사와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한편, KT 재공영화를 통한 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해 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2월, KT가 주관한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서비스’에 대해 폭로했다. KT 측은 이 전화투표 서비스를 국제전화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전화였던 것이다. 얼마 전 감사원도 이 점을 인정해 KT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KT 사측은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보복 탄압을 가했다. 그를 출퇴근만 5시간이 걸리는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내며 버텼다.

급기야 사측은 지난해 12월 31일 ‘무단결근, 무단조퇴’를 사유로 이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 위원장이 허리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병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다.

사측은 공익제보자 시상식 참가를 위해 조퇴를 신청한 것도 ‘무단조퇴’로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 7대 경관에 대한 공익제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 호루라기재단의 ‘호루라기상 특별상’,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참여연대의 ‘의인상’을 차례로 수상했다. “MB 낙하산” 이석채와 KT 사측에겐 이런 이해관 위원장이 눈엣가시였겠지만, 그의 정당하고 용기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것이다.

한편, 사측은 대선 직후 유덕상 전 KT 노조 위원장도 해고했다. 유 전 위원장은 누적된 각종 지병이 호전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진단서를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했다. 친여당 성향인 사측은, 유 전 위원장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도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이다.

사실, 사측은 KT 민영화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과 노동 탄압 과정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활동가들을 탄압해 왔다. 현 노조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민주동지회’와 복수노조를 추구하는 ‘KT 새노조’의 활동가들이 그 중심에 섰고, 이 때문에 2011년에도 민주동지회 회원 두 명이 해고를 당했다.(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원직 복직을 쟁취했다.)

이해관, 유덕상 동지에 대한 해고도 이런 활동가 탄압의 일환이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이 우리의 저항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

두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KT 새노조와 민주동지회는 적극 연대해 민주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고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원준 KT 민주동지회 회원



1월 2일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 해임 규탄 기자회견.

〈레프트21〉일루전 화백 ‘올해의 시사만화상’ 우수상 수상

〈레프트21〉의 일루전 화백이 전국 시사만화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시사만화상’ 중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전국시사만화협회 카페 <http://cafe.naver.com/sisacartoon>).

2012년 ‘올해의 시사만화상’의 대상은 〈경향신문〉 ‘장도리’ 박순환 화백이 그린 ‘산업화와 88만 원 세대’가, 우수상은 일루전 화백의 ‘MEGA 박’s 상영예정작’과 함께 〈내일신문〉 김경수 화백의 ‘문제는...’과 〈한국경제〉 조영남 화백의 ‘고객 결으로’가 수상했다.

이 상은 시사만화가들의 모임인 전국시사만화협회가 “한국의 시사만화가들에 대한 격려와 한국시사만화의 발전을 위해 매년 연말에 작품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이래 올해로 다섯 번째다. 전국 시사만화협회장인 이동수 화백은 〈한겨레〉 만화초대석 초대작가로 활동한 바 있다.

하종원 심사위원장(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은 “만화 그 자체의 재미와 은유의 묘미를 살렸는지, 전체적인 구성과 선의 조화가 이뤄졌는지, 메시지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레프트21〉 일루전 화백은 박근혜 당선 직후 그린 ‘MEGA 박’s 상영예정작’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영화 등의 정책을 재치 있게 풍자·묘사한 바 있다.

‘MEGA 박’s 상영예정작’은 심사위원들에게 “한 칸 만화의 도식적 표현을 깨고 새로운 형식의 시도와 사진을 통

한 풀라주적인 기법을 토대로 직접적 현실의 증위와 간접적 상징의 증위를 절묘하게 결합시켰다. 특히 마무리에서 ‘볼 거 없다. 운동하러 가자!’는 화자의 다중적 의미의 발언을 통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은근한 발언을 던지는 묘미도 보여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루전 화백은 2009년 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만평을 연재하면서 항상 촌철살인의 풍자와 폭로로 〈레프트21〉의 지면을 빛내 왔고 독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 왔다. 이런 공로 속에 나타난 이번 수상 결과에 대해 〈레프트21〉 편집부는 독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일루전 화백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축하를 보낸다.

MEGA 박’s 상영예정작

상영관	장르	제목
수도관	민영화	호빗: 뜻밖의 물
노동관	액션영화	주먹왕 몽구
역사관	코미디영화	가문의 귀환
경제관	호러영화	레이제라블
의료관	민영화	반창꼬
VIP관	부귀영화	타워(펠리스)

〈레프트21〉 95호 실린 ‘MEGA 박’s 상영예정작’.

독자토론광장

1월 23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Letter@left21.com

매서운 겨울, 한 송이 눈처럼 흩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희광반조’는 “빛을 돌이켜 거꾸로 비춘다”는 뜻이다. 초는 그 빛을 다하기 전 한 차례 크게 불꽃을 일으킨다. 정리 해고와 노조탄압에 고통받던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 비정규직의 차별에 시달리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이운남, 청년활동가 최경남, 노조 탄압의 중압감에 시달리던 외대노조 위원장 이호일, 이호일 지부장의 빈소에서 심장 마비로 쓰러진 외대지부 수석부위원장 이기연. 이들은 모두 박근혜 당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동지들의 죽음 앞에서 버틸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다.

지난 5년간 무참히 짓밟힌 노동자들의 권리, 노조 탄압,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차별, 이에 맞서 목숨을 걸고 철탑과 크레인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지만 노동자들이 삶의 동아줄을 놓지 않았던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 즉 인간의 자의식의 외화라는 아름다운 노동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박근혜 당선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 힘겹게 잡고 있던 삶의 동아줄을 내려 놓아야만 했다.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남은 것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뿐이었다.

연이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며 자괴감에 빠져 있다. 문득 희광반조가 떠올랐다. 어쩌면 이들은 사그라지는 빛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바쳐 마지막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엥겔스는 “선거는 노동계급의 온도와 같은 것이다” 하고 말했다. 대선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의 온도는 몇 도일까? 물이 1백 도가 되어만 끓듯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우리의 온도가 아직 덜 뜨거운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온도가 끓는 점에 다다르도록 불꽃을 피우고, 바람을 막고, 기름을 부어야 한다. 지금 울산의 송전탑 위에서, 대한문 앞에서, 강

정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 작은 불씨를 지켜가야 한다.

뜨거워진 온도계의 끝에는 자본가들과 민중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해 있을 것이다. 돌아가신 다섯 분의 노동자도 꺼져 가는 불 앞에서 마지막 불꽃을 일으켜 온도를 높이고 있다. 희광반조다. 그 어느 것보다도 절박하고 눈물겨운 희광반조다.

다섯 분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해져서거나,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보다 다수여서라기보다도, 바로 자본주의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절한, 인간이 노동의 주체가 되길 바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권윤섭



사건 현장

〈레미제라블〉 —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영화 〈레미제라블〉은 요즘처럼 암울한 대선 결과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절망적인 투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드라마다.

영화의 배경은 프랑스 혁명이다. 물론 프랑스에서 혁명은 1789년에 최초로 일어나 봉건제를 폐지했으나 정치 체제는 혁명과 반동을 거듭하며 결국 1815년에 왕정이 복귀한다. 1830년 7월 반동적인 왕인 샤를 10세에 맞서 일명 ‘바리케이드’ 혁명이 벌어져 샤를 10세를 쫓아낸다.(이와 유사하며 더 강력한 혁명이 1848년 2월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 위기 등으로 민중의 고통은 계속됐고 이런 상황에서 1832년 6월에 일어난 실패한 봉기가 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

작가 빅토르 위고는 1830년, 1832년, 1848년을 경험하며, 1862년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 작품 속 가련한 인물들 중 감옥에서 태어나 빈민을 억압하는 앞잡이가 된 자베르가 포함되는 것을 보면 당시 혁명의 기운이 어찌

했는지, 빅토르 위고가 얼마나 피지배자들을 사랑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자베르가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꽤 흥미롭다. 자베르 심리에 대한 묘사는 소위 다른 ‘빨간 영화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롭다.

〈26년〉에서 살아있는 ‘죄인’ 때문에 계엄군으로 작전 중 귀가 잘리는 피해자면서도 그 ‘죄인’을 위해 보좌관으로 생을 마감했던 마상열, 〈남영동 1985〉에서 민주투사들을 고문해 왔지만 자신의 착취와 소외를 느끼며 김종태(김근태를 모델로 삼은 인물) 앞에서 자신의 괴로운 심리를 잘 보여준 이계장 등. 매우 유사한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즉, 지배자들을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법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삶과 생각을 바치지만 결국 현실과 이상적 신념이 맞지 않는 심리적 ‘멘붕’을 겪는 과정 말이다.

바리케이드 앞에서 한 소년이 저항하는 민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패배감에 젖어 있던 투사들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 손에 손을 맞잡는 장면은 다시 한 번 주먹을 불끈 쥐게 했다. 그야말로 명장면이다. 몇 번이고 혁명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뮤지컬식의 지루함이 짝 가시고, 오히려 함께 노래하고 싶어졌다.

비록 얼마 전에는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노조에서 투쟁하다 사측의 1백85억 원 손해배상과 일방적인 무기한 휴직을 당했던 최강서 동지의 죽음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사측의 폭력에 분노했고 현대중공업 해고 후 4년째 복직 투쟁 중이던 이운남 동지의 죽음이 있었지만 말이다.

이 모든 죽음들이 박근혜 정권에 절망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일 테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두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택했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민주노조 사수를 부탁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구호는 대선 전이나 후나 여전하다.

민중의 노래 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서지애

고(故) 조성민 동지 1주기 추모글

“생전 동지의 기여가 만개할 그 날을 위해 더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은 조성민 동지의 1주기였다. 20여 년을 혁명적 사회주의자로 살아 온 조성민 동지는 지난해 ‘한미FTA 날치기 무효·디도스 테러 한나라당 해체’ 촛불대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변을 당했다. 이 글은 조성민 동지 묘소에서 열린 1주기 행사에서 낭독한 추모글을 보내 온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리도 빨리 지나가는군요.

동지와 약속했던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 동지가 떠나던 날 다짐했던 약속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좀 더 나를 활동 속으로 던져 넣겠다던 약속은 일부만 이행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어요.

옆의 동지가 넘어질 때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옆의 동지가 일어설 때는 보다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할 줄 알았던 사람. 동지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네요. 요즘처럼 한파가 몰아칠 때 더 그래요.

세상 얘기 좀 해 줄게요.

지난 1년간 동지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혁명은 이 땅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동지가 생전에 보았던 아랍 혁명은 이집트에서 무르시아 군부의 반혁명 시도를 막아서고, 시리아에서 아사드를 고립시켰으며, 팔레스타인에서 가자 지구 폭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며 발전해 가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역사적 공동총파업이 있었지요.

미국에서는 시카고 교사 노조 파업 승리에 이어 월마트 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는 등 노동계급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경제 위기 심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와 함께 티베트 민중의 독립을 요구하는 분신이 대거 일어나고 있고, 남아공과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에서 노동자와 학생과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이 분출하는 등 세계 도처에서 지배 체제에 가해지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정치적 양극화 속에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며 우리의 실천을 역사의 시험

대에 올려놓기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열린 선거공간을 타고 상승하려는 때 터진 통진당의 선거부정과 잇따른 실책으로 노동계급 정치조직이 사분오열돼 제대로 왼쪽 축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박근혜의 집권을 막는 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노동자들은 고압송전철탑에 올라 목숨을 건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고, 절망과 분노로 노동자와 활동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어요.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처지에서 1년을 맞게 됐어요.

바리케이드 저쪽에 고통전가를 위해 결집한 지배계급이 공격의 예봉을 세우고 있어요.

바리케이드 이쪽에는 전열이 채 정비되지 않은 노동계급과 박근혜에 반대표를 던진 1천4백70만 명의 대중이 있어요. 우리는 이들 속에서 무너진 공동전선을 복구하고 노동계급이 전투력을 잃지 않고 다가올 공격에 맞서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행동해야 해요.

사회주의자는 절망에 빠지거나 회피하지 않고 주어진 난관을 혁명의 재료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죠. 어떤 것은 너무 빨리 타버리고, 어떤 것은 축축하고, 어떤 것은 연기가 너무 많이 나겠지만, 냉정과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더디더라도 언젠가는 발화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전에 동지가 남긴 기여가 숲을 이루며 만개하는 날, 나도 기쁨에 겨워 동지와 함께 이 대지에 누울 수 있겠지요.

그날을 위해 나를 한 걸음 더 실천 속으로 던져 넣겠습니다. 동지가 왔으면 좋아했을 영화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를 동지와 함께 불러보고 싶은 날입니다.

이창배

“우리의 성전에 뛰어들 텐가
누가 용감하게 나와 함께 설 것인가
바리케이드 너머로
그대가 갈망하던 세상이 있는가
그렇다면 전투에 가담하시오
그것이 그대들에게 자유의 권리를 줄 테니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는가
그리하면 우리의 깃발은 전진할 테니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살아남을 것이오
그대는 굳게 일어나 기회를 붙들 것인가
순교자가 흘린 피가
프랑스의 초원마다 흐를 것이오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복소리 돼 울릴 때
내일이 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리라

— 〈레미제라블〉 삽입곡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중에서



감옥에서 온 신년 인사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과 도움으로 사회 변혁으로 나아가는 생생한 모습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레프트21〉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레프트21〉의 힘찬 목소

리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병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활동가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동지들이 보여 주신 관심 잊지 않겠습니다.

양희성 파업으로 구속된 화물연대 노동자

60대 노동자들이 굴뚝 농성 3일 만에 승리하다

살을 에는 추위를 잊게 하는 새해 선물 같은 소식

새해를 이틀 앞두고 해고돼 이틀날 굴뚝 고공 농성에 들어간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사흘 만에 승리했다. 2013년 새해를 여는 반가운 승리 소식이다.

이 60대 경비 노동자들은 정년을 넘기 고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매년 재계약 촉탁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12년 초에 일부 노동자가 해고되자 이들은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노조를 만들었고, 최근 벌어진 해고에 맞서 절박한 심정으로 굴뚝에 올랐다.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을 고공 농성을 초인적 투지로 견뎌냈다. 이들은 “쌍용차 송전탑 농성을 신문에선 보고 고공 농성을 결정했다”고 한다.

초인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이 해를 넘겨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 부촌 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는 늙은 노동자들이 강추위 속에서 또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급방 여론의 초점이 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즉각 이들의 투쟁을 지원했고 통합진보당 서울시당과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의원도 연대에 나섰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에 더해 진보 진영이 힘을 모아 연대에 나서자 여론은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노동부 장관이 “전국의 고공 농성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혀야 했다.

투쟁을 이끈 민형기 분회장은 “쌍용차, 현대차 농성과 함께 거론되면서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위로부터의 압력이 형성된 듯하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문제가 쉽게 해결된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보수우파 정부의 재집권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낙담하고 있는 지금, 단결해서 투쟁하고 연대하면 이길 수 있다는 반가운 새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 준 셈이다.

민형기 분회장은 눈시울을 적시며 “지금 투쟁하는 쌍차와 현대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김승현

민형기 분회장이
쌍용차·현대차 동지들에게

“꼭 함께 승리하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 상황이나 시기, 부촌이라는 작업장 위치 같은 여러 가지 면이 저희에게 유리했던 덕분에 빨리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크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쟁하시는데,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꼭 지금 투쟁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부자촌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올려파진 고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당당한 외침.

약속 어기며 쌍용차 노동자들을 우롱한 박근혜

절망에 맞서 희망을 만들어내려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에 대한 연대가 계속되고 있다. 성탄절에는 기독교 합동 기도회가 열렸고, 다음날에는 불교계가 진행한 10만 배 회향식이 있었다. 새해 첫 날에도 천주교 미사가 열렸다.

새해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한문과 평택 쌍용차 공장 앞 송전탑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목숨을 건’ 송전탑 고공 농성은 5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압력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대선 후 첫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금세 입을 싹 씻고 태도를 바꾸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 대변인과 원내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말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 박근혜가 TV토론에서 이정희 후보의 다그침에 전혀 부정하지 않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말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쌍용차 국정조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1월 4일 마지막에 평택 송전탑을 찾아 온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도 노동자들의 가슴에 파멸이 들만한 소리만 골라서 했다. 이한구는 “[국정조사에] 회의적”이라며 “(쌍용차를) 중국에 넘겼을 때는 민주당 정권 때”라며 “이미 옆길러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갑 농성자들을 향해 “저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위험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반면 이

한구는 쌍용차 사장 이유일을 만나서는 “갑자기 찾아와 경영에 부담될까 봐 죄송하다”며 한껏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다.

23명의 죽음을 낳을 정도로 극단적인 살인해고와 살인진압을 자행했던 자들이 그것에 항의해서 생명과 삶을 지키려는 노동자에게 ‘위험하다’, ‘극단적이다’ 하고 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가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한창 일할 나이에 퇴출시키는 고용 형태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는 말한 것이 그냥 해본 말일 뿐임을 보여 준다.

나이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만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급휴직자만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자 복직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이라는 온갖 빈문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급휴직자 복직은 2010년에 이미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방안은 수많은 무급휴직자와 해고 노동자들을 여전히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모는 것일뿐이다. 이미 23명의 죽음이 나온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사측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무려 2백37억 원의 손배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손배 때문에 한진중공업에서 최강서 열사의 죽음이 발생한 상황에서 말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끝내고, 머리에 고드름이 어는 추위 속에서도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동지들을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저들이 국정조사 즉각 실시와 해고자 복직 요구를 받아들여도 록 더 큰 압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유병규·전지운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노조 탄압에 맞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다

최근 대학 청소, 경비, 시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연세대는 12월 11일 본관 점거 농성 3시간 만에 민주노조를 탄압한 용역업체 장풍HR과 제일휴먼을 퇴출시켰다. 불과 닷새 만에 학생 2만 3백37명이 참여한 ‘악질업체 퇴출 서명운동’은 학교 측을 압박하는 강력한 힘이 됐다.

연세대 당국은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사과하고, 용역업체 퇴출을 약속하고,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지겠다고 서명까지 했다. 이는 연세대 당국이 ‘진짜 사장’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여러 대학에서 벌어질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12월 21일 단호한 본관 점거 투쟁으로 노조 탄압과 온갖 비리를 저질러 온 악질 용역업체 소장을 퇴출시켰다. 학생 수천 명이 악질 용역업체 퇴출 서명에 동참하는 등 투쟁에 힘을 보탰다.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도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학교 당국의 공격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따냈다. 고려대 당국은 기존 조합원들을 전환배치하고 그 자리에 계약직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며 노조를 약화시키려 했다. 12월 27일 노동자들은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고 점거 이틀만에 학교 당국은 앞으로는 직접 고용시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고, 현재 정

원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핵심 요구였던 전환배치 저지를 고수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고려대 당국이 직접 정원을 언급하며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등 학교 당국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온갖 차별과 천대를 받아 왔던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조직을 확대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 들은 친사측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려 했다. 노동자들의 승리 소식은 이런 비열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 분회는 용역업체와 학교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차 노동자와 급식 노동자 들이 새롭게 가입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분회도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등 성장했다. 한 청소 노동자는 “우리는 노동자들도 새로 가입하고 커지고 있다”며 민주노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성과는 이런 자신감 속에서 가능했다.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과는 연대와 투쟁을 통해 우파 정권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승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입단협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자.

정선영